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

윤상용 외

발간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규모의 영세성, 기업가 정신의 부족 등으로 대내외 경제적·정책적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여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들 소상공인은 대내외적 영업환경의 악화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일부 업종은 대기업 진출, 과잉화 등으로 인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과 담보의 부족 등으로 금융권의 금융소외 현상도 심화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은 인구 및 금융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업환경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이어서, 국가정책적으로 지역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효율성/효과성 제고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금융과 관련한 가능한 각종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안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태 및 다양한 소상공인 금융환경 등을 살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윤상용 박사를 비롯하여 많은 조언과 참여를 아끼지 않아주신 외부연구진 및 자문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연구심의위원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 요약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이들은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회 안전망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 규모가 영세하여 대내·외 경제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결과 소상공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KB 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개인 창업자 4명 중 3명은 10년 안에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은 인구 및 금융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업환경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비수도권 지역은 실물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조성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성된 자금도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분석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제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난 '99년 이후부터 매년 3,000~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내용과 방식을 살펴보면, 자금수요와 활용계획에 따른 지원 효율성보다는 주로 창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더 치중해 온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창업 업종의 편중도를 높이는 등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영업환경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부문 등에서 작지 않은 성과를 보여 주었고, 미시적 분석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해소, 금융비용 축소 등 재무적인 측면에서 경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수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고, 또한 소상공인 정책금리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일괄적으로 저금리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는 창업초기의 혁신기업에서 가장 크게 높고, 시장실패(창업, 기술혁신 등)로 인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저금리보다는 지원규모 확대 혹은 공적 신용보증 등으로 지원효과를 상당부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자금은 지원대상의 특성, 지원자금의 사용목적 등에 따른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저금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대상 및 방식이 유사하여 지원대상의 선정과 중복지원의 문제

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대면방식에 의해 구매행위가 이루어져 지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영업권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기반이 강하여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며, 지역경제의 소득순환의 매개체가 되므로, 소상공인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내 경제흐름이 원활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재원 및 민간부문에서 낮은 조달 비용으로 유입된 자금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조성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혁신기회의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의해 창출된 자원(수익)이 다시 소상공인 분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장기적 기반 조성과 함께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및 관련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전담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회계 자료 등이 부족하므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전담하여 소상공인의 각종 정보, 위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주로 재무적 현황보다는 장기적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정된 정책자금을 업종별(목적사업별)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보증금액의 업종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과당경쟁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용도별로, 예를 들어 기존사업자, 창업자 그리고 폐업/전업 및 구조조정 등으로 한도를 배정하여 자금을 분배하고, 혁신 잠재력과 역량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배분비율을 매출액이나 영업기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이나 영업기간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업체에 일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전략적 목표를 갖는 부문에 대해서 우선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방법, 상환기간, 상환조건 등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소상공인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 및 육성정책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들 유형 간에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으로 소상공인 개인의 특성(즉, 성별, 나이, 지역, 자산 규모, 신용도 등)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금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들이 정책자금 이용자의 창업, 성장단계, 자금상환 이행정도 등에 따라 고객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전용 차세대 DB를 구축하고, 정책자금 이용과 함께 신용도 개선의 기회제공 및 정책자금 통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성공 및 실패사례의 지속적인 자료화로 정책자금 지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하고, 정책자금 이용과 동시에 신용도 개선의 기회제공 및 정책자금 통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자금 추경예산 편성, 목적별 자금배정 등 관련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정성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여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책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정책자금 성과관리시스템에는 지원규모의 적정성, 분야별 균형 등 지원원칙의 객관성과 형평성,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정책자금의 사업적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실적의 기본통계를 정비하고 사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조성과 이에 따르는 자금운용을 반영하는 계획 수립 등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정책 외에도 소상공인 경쟁력·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 관련 기관의 연계협력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지자체는 자금지원 등과 더불어 운영역량의 개발과 축적, 사업모델의 개선 및 차별적 경쟁요인 발굴 등 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적인 영역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공급하며, 현 사업에서의 성과 극대화 및 사업영역의 확대,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변환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의 공유, 여유자원의 소상공산업의 재투자 등을 유도하는 등의 교육,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단순히 자금만을 제공하는 정책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의 현 니즈(needs)에 맞는 지원책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요자가 현재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현장과의 괴리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직업 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기형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특성(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자의 퇴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교육 강화 및 경쟁이 치열한 부문 창업을 억제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등의 시장 창출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소상공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의 소상공인 창업으로 지역 내 소상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지만 음식업이나 소매업 등에 집중된 생계형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직업만족도도 낮을 뿐 아니라 경쟁우위가 없어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모델이나 사업기반의 개발 및 공급이 부족하고, 대다수 소상공인 창업자가 기존 사업모델이나 아이템을 선택하는 하는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의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의 양적확대와 함께 공급의 다양화, 세분화, 고급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창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단순한 양적확대보다 공급의 다양화 및 차별화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 내 소상공인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여야 한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보급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성장단계에 따라 구조적, 질적 변환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물론, 생산 및 제공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현 사업의 공급채널이나 유통채널 등을

확대통합하거나 보완적, 수평적 서비스(사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하고, 공동브랜드나 공동물류, 원부자재 공동소싱 등의 협력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지원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은 물론, 중소기업 등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사업모델의 소상공 산업에의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야별 컨설팅, 교육, 전문서비스 아웃소싱 등 다양한 지식관련 분야의 지식기반 소상공인 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소수 모델에 대해서 ‘공영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성공사례를 연구기관, 컨설팅사,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체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한 후 소상공인에게 보급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 간 협력적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업종 및 서비스 등에 있어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간의 브랜드 및 구매조달 기능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 비즈니스 구조 구축도 필요하다.

요컨대, 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정책과 대상의 효율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따져, 먼저 단순히 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범주를 업종, 업력, 매출액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형평성 및 정책 목적성에 맞게 대폭 증가시켜야 하고, 정책자금 적용금리도 지원대상과 지원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상 효율 증대를 위해 창업지원 및 시설자금은 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자금 및 운전자금 등은 지자체가 저금리 방식으로 지원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목적성 지원과 운전자본 등은 가능한 저금리로, 창업지원, 시장실패 보완, 시설자금 지원 등은 저금리 지원 대신 지원한도를 늘려 주거나 신용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큰 틀 하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의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자체는 무조건적인 장기저리 자금의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지역 내 특성, 지자체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자금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상공인 특성과 현황

제1절 소상공인의 특성	7
1. 소상공인의 개념적 정의	7
2. 소상공업의 특성	9
3. 소상공인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11
제2절 소상공인 사업환경과 현황	14
1. 소상공업 사업환경의 검토	14
2. 소상공인 현황	18

제3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제1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배경	27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배경과 필요성	27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정	30
제2절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현황	35
1. 정부(중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35
제3절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현황	43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43
2. 타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45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식 비교	52
4. 지원통계	55
제4절 외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60
1. 외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60
2. 시사점	68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과분석

제1절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	69
1.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에 관한 논의	69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	72
제2절 정책자금 지원규모 적정성 평가	96
1. 정책자금 적정규모 산정방식에 관한 논의	96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평가	98
제3절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102
1. 정책자금 적정금리 산정에 관한 논의	102
2. 정책자금 금리결정 방식	105
3.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106
제4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108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	108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의 성과	110

제5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1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재검토	111
1. 현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검토	111
2. 지자체(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검토	113
3. 2013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114
제2절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17
1.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17
2.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18
3.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12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123
제2절 정책적 제언	125

표 목 차

<표 2-1> 소상공인의 범위	8
<표 2-2>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특성	12
<표 2-3>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14
<표 2-4> 국내 주요 경제지표	15
<표 2-5> 충청남도 주요 경제지표	16
<표 2-6>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18
<표 2-7>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	19
<표 2-8> 업종별, 규모별 사업체수	21
<표 2-9> 업종별, 규모별 종사자수	22
<표 2-10> 업종별 초기 창업자금	23
<표 3-1>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리적 근거	29
<표 3-2> 시기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30
<표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진체계	35
<표 3-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추이	37
<표 3-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12년 기준)	37
<표 3-6>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12년 기준)	47
<표 3-7>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55
<표 3-8>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56
<표 3-9> 업종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통계	57
<표 3-10> 업종별 충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통계	58
<표 3-11> 충남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통계	59
<표 3-12>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특별보증 프로그램	61
<표 3-13> 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의 운용실적(승인금액)	62
<표 3-14> 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의 운용실적(대출잔액)	62
<표 3-15> 일본공고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64
<표 3-16> 일본 52개 신용보증협회의 운용실적	65
<표 3-17> 독일보증협회 산하 총보증기업수 및 총보증액	67
<표 3-18> 독일 KfW의 주요 기능 및 대출실적	67
<표 4-1>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74
<표 4-2> 지역경제 파급효과(전국, '12년 기준)	75
<표 4-3>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전국, '12년 기준)	75
<표 4-4> 충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77
<표 4-5> 지역경제 파급효과(충남, '12년 기준)	78
<표 4-6>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충남, '12년 기준)	78
<표 4-7> 매출액 규모별 자금조달 목적	80
<표 4-8>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국)	82
<표 4-9>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국)	82
<표 4-10>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남)	83

<표 4-11>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남)	83
<표 4-12>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강원)	84
<표 4-13>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강원)	84
<표 4-14>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인천)	85
<표 4-15>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인천)	85
<표 4-16>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북)	86
<표 4-17>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북)	86
<표 4-18>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광주)	87
<표 4-19>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광주)	87
<표 4-20>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남)	88
<표 4-21>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남)	88
<표 4-22>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북)	89
<표 4-23>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북)	89
<표 4-24>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부산)	90
<표 4-25>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부산)	90
<표 4-26>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구)	91
<표 4-27>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구)	91
<표 4-28>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전)	92
<표 4-29>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전)	92
<표 4-30>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남)	93
<표 4-31>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남)	93
<표 4-32>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북)	94
<표 4-33>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북)	94
<표 4-34>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제주)	95
<표 4-35>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제주)	95
<표 4-36> 업종별 향후 보완사항	98
<표 4-37> '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및 주요내용	99
<표 4-38> 중소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사업체, 종사자, 정책자금 규모 비중	100
<표 4-39>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사업체·종사자당 지원규모 비교	100
<표 5-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기관 운영체계	111

그 립 목 차

<그림 2-1> 국가 및 충남지역 경제지표 비교	16
<그림 2-2> 충청남도 각종 경제지표 추이	17
<그림 2-3> 충청남도 지역별 인구수 추이 및 특성	17
<그림 2-4>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	19
<그림 2-5> 충남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의 변화 추이	19

<그림 2-6>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	20
<그림 2-7>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20
<그림 2-8> 사업체·사업장 형태별 비중	23
<그림 2-9> 월평균 매출액·순이익 규모 비중	24
<그림 2-10> 매출액·순이익의 증감	24
<그림 2-11> 자금조달 방식 우선순위	24
<그림 2-12>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 추이	26
<그림 3-1> 지역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12년 기준)	55
<그림 3-2> 업종별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 및 평균 지원금(전국)	57
<그림 3-3> 업종별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 및 평균 지원금(충남)	58
<그림 3-4> 지역별 업체수 및 평균 지원금(충남)	59
<그림 4-1>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비중과 추이	74
<그림 4-2> 전국 소상공인 정책자금 투입에 따른 업종별 직접과급효과	76
<그림 4-3> 충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비중과 추이	77
<그림 4-4> 충남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투입에 따른 업종별 직접과급효과	79
<그림 4-5>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및 대안	80
<그림 4-6> 신용보증 정책지원 효과	81
<그림 4-7> 향후 보완사항	81
<그림 4-8> 충남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83
<그림 4-9> 강원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84
<그림 4-10> 인천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85
<그림 4-11> 경북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86
<그림 4-12> 광주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87
<그림 4-13> 경남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88
<그림 4-14> 충북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89
<그림 4-15> 부산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90
<그림 4-16> 대구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91
<그림 4-17> 대전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92
<그림 4-18> 전남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93
<그림 4-19> 전북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94
<그림 4-20> 제주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95
<그림 4-21> 향후 보완사항	96
<그림 4-22> 정책금융의 선호 혹은 미선호 이유	106
<그림 4-23> 공적자금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변화 추이	10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업종 및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음.
 - 소상공인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기회를 얻지 못하는 미숙련, 저학력 노동자나 실직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안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이들은 대내·외의 경제 및 정책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 실제로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소상공인은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매출액 감소, 과잉화로 인한 경쟁 심화,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 확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금감원 조사결과('12년)에서 소상공인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업종의 대출 비중도 60%에 육박
 - KB연구소('12년)는 개인창업자 4명 중 3명은 10년 안에, 2명은 3년 안에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2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2.6%가 내년도 매출액 감소를 예상
-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배제 현상 심화와 신탁,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위축 등으로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사금융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충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은 인구 및 금융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어 사업환경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
 - 비수도권 지역은 실물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자금조성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된 자금도 지역에 투자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

-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지자체는 지역경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
 -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서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각각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을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는 소상공인 금융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축소되고 나아가 금리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09년에는 다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1조원을 공급하였다가 '10년 이후 4,000억 원대의 예전 수준으로 복귀
- 하지만 이러한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대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창업촉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보다는 실업완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단기 실적위주의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 이러한 정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도 최근 부의 양극화와 금융소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만성적 자금 초과수요, 중복적 지원, 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
 - 매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하루 만에 자금이 소진되는 등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은 초과수요 문제 뿐 아니라 자금수요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 대상 연구에 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수준
 - 영세적인 소상공인 업체 특성상 회계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고, 나아가 분석모형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
- 본 연구의 목적은 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한 각종 미시자료를 수집·활용하여 현행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안하여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 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등을 살펴보고,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정책 당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
 -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현황, 재무현황, 정책자금 수요 등과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 특히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실태와 금융현황 등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내용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안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기대효과를 가짐.
 - 기존 소상공인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실효성 높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비전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의 토대를 제공
 - 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충남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자금조달에 따른 불편 및 개선사항, 정책자금 지원효과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모색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먼저 소상공인의 개념적 특성을 정의하고, 소상공업의 특성 및 국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을 고찰
-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지원배경 및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고,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특성 등을 정리
- 국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소상공인 경영/금융 실태 및 제도적 환경 등을 조사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의 적정성을 평가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등을 제안

2. 연구의 방법

- 소상공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실태자료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타 지자체의 정책자금 운영 효율성 및 성과를 비교·평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과성’을 분석
 - 거시적 분석으로서,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분석
 - 미시적 분석의 비재무적 분석방법으로,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 미시적 분석의 재무적 분석방법으로, 정책자금 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감을 분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적정성’을 분석
 -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와 비교
 - 정책자금 적용금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분석
 -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
- 관련문헌의 연구, 전문가와의 면담, 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관련 정책제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

제2장 소상공인 특성과 현황

제1절 소상공인의 특성

1. 소상공인의 개념적 정의

-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방법,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용되기 시작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정부가 특별히 주목하여 지원할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분류된 개념
-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범위설정의 기준은 정책대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내의 경우 소상공인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업종별 상시 종업원 수에 의해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0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따라서 소상공인은 다음의 범주에 있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위 안에 속해 있으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집단이며,
- 개인 사업 및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기업 형태의 구분 없이,
-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집단

<표 2-1> 소상공인의 범위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10인 미만	50인 미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인 미만	
그 외의 업종		10인 미만

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2.01.25(대통령령 23527호),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의 범위와는 별개로,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노동자를 의미
 - 정부의 영세자영업자대책(“05.5.31)을 보면 소상공인 문제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혼용하여 사용¹⁾
 - 선진국은 자영업자를 기업가로 인식하여 자영업자의 문제를 기업가 정신의 진작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만을 주로 기업가라고 인식할 뿐 소상공인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사업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큼.
 - 전문직 자영업자부터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까지 자영업자 안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해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일관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존재²⁾
- 정책지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
 -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체 규모(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1~4인 또는 1~9인 미만)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유급근로자 없이 자영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합하여 지칭하는 사업주

1) 임금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주, 고용한 사람이 없는 고용주를 ‘자영자’라고 정의하고,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쳐 ‘자영업주’라고 함. 소상공인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조사에 근거한 개념이고,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자 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 ‘경제활동인구통계’이기 때문에 양자의 개념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로 표현.

2)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 노동인구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

2. 소상공업의 특성

1) 시장진입 및 탈퇴의 자유로움

- 일반적으로 창업에 소요되는 자본규모가 작고, 기술의 특수성이 떨어지며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어 진입탈퇴가 매우 자유로움.
 -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계형 서비스업의 경우 법적 진입장벽 비율이 13.0%로 서비스업 전체 평균(31.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활동 가능인구들의 소상공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하여 우리나라의 소상공업의 고용비중은 매우 높음.
- 가격이나 품질, 특성이 유사하여 경쟁이 치열
 - 내수시장이 위축될 때, 제한된 시장 내에서 매출이 감소되어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2) 업종의 다양성

- 소상공업의 업종 분포는 광업, 제조업에서부터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 산업이나 업종마다 소상공업이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소상공업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재화나 서비스, 즉 생필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포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정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와 밀착된 지역에 산재

3) 규모의 영세성 및 가족중심 경영

-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사자가 대부분 5인 미만으로 규모가 매우 작음.
 - 소상공업체 종사자수는 평균적으로 약 2명 정도로 소상공업체 44.3%가 고용인을 두지 않고 사업주 혼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거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
- 소상공업은 규모가 작고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

을 사업주의 개인 역량에 의존

- 소상공인은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일인 다역'으로 수행하고 있고, 체계적인 정보나 경영기업에 의하기 보다는 주로 자기경험이나 비공식적인 경영기법으로 사업을 운영
- 제도금융권과의 접근이 어려워,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비제도권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창업 이전에 해당 업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없이, 소비자의 니즈나 상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음.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판매기법과 시설개선 등을 적시에 도입하지 못함.
- 내수 중심의 영세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업황이 국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3. 소상공인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1) 국민경제의 기반 형성

- 소상공업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상공업 발전으로 국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
 - 경제활동 인구 중 40%가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어 소상공업의 발전은 내수를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 반면, 소상공인의 쇠퇴는 고용의 불안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서비스 산업의 고용탄성치는 제조업의 2배 수준
 - 특히 생계형 서비스 산업은 중년층, 여성층 등 소득 취약층의 고용 흡수력이 높음.
- 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업이 활성화되어야 함.
 - 소상공인은 가족 중심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
 - 소상공업은 저숙련 노동자나 여성 그리고 실직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됨.

2) 대기업으로의 성장 토대

- 소상공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
 - 현재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부분 초기에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
 - 초기에는 소기업으로 출발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여 중견기업이 되고 나아가 대기업으로도 성장하는 것으로 소상공업은 미래의 대기업에 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보면, 제1단계에서는 창업자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다가 가족종사자가 참여하고, 이윤이 증대됨에 따라 경영형태가 생업경영에서 기업경영으로 확장되면서 임금노동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로 성장
 - 창업초기에는 장부상으로 가게와 영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로 가족구성원들의 노동참여가 위주가 되어 가게와 사업이 혼용되어 있지만,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경영 형태로 운영되면서 가게와 사업이 조금씩 분리

<표 2-2>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특성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제5단계
노동력 구성	업주	업주 가족종사자	업주 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	업주 명목적 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	업주 관리직 종사자 임금노동자
경영목적	생계유지 (생활안정)		이윤확대 (기업성장)		
경영형태	생업경영		기업경영		
경영특성	장부상 가계와 영업의 미분리 가족 노동에의 의존 주거와 사업자의 혼용		생성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개선		

- 소상공업은 오늘날 기술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지식기반경제란 거대자본을 기초로 하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의 활용, 지식창출, 활용능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므로,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지식창출, 활용능력의 제공에 있어 소규모, 소수의 민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
 - 소규모 사업체인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민첩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 기반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기술혁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3) 지역경제의 원동력

- 소상공업은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대면방식에 의해 구매행위가 이루어져 지역성을 가짐.
- 소상공업의 영업권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기반이 강하여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며, 지역경제의 소득순환의 매개체가 됨.
 - 만일 지역에서의 소상공업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 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서비스의 구매가 타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에서의 소득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없음.
- 소상공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내 경제흐름이 원활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해 짐.
 - 도소매업에서 신유통업체(대형마트, 무점포업체 등)의 출현과 성장으로 소상공인의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매력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공이라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음식숙박업에서도 고급화, 차별화 등으로 점점 소상공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밀착형 산업으로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

제2절 소상공인 사업환경과 현황

1. 소상공업 사업환경의 검토

1)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 '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경제의 경제적 충격이 심화되고 있음.
- 향후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정부도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실정

<표 2-3>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세계	5.3	3.9	3.3	3.6
선진국	3.2	1.6	1.3	1.5
미국	3.0	1.7	2.2	2.1
유로존	1.9	1.5	-0.4	0.2
독일	3.6	3.1	0.9	0.9
프랑스	1.7	1.7	0.1	0.4
이탈리아	1.8	0.4	-2.3	-0.7
스페인	-0.1	0.7	-1.5	-1.3
그리스	-4.4	-6.9	-6.0	-4.0
포르투갈	1.3	-1.7	-3.0	-1.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2012

■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

- 장기 경제침체로 자영업자 및 저소득 서민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심각하고, 가계부채 문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정책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11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 명에 이르며, 이는 '10년(80만5천여 명)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12년에는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07년 경제위기보다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음.

- '11년 4사분기부터 시작된 현재의 경기둔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 대외적 여건의 악화 요인 외에 소득 2만 불을 넘으면서 나타나는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에 따른 전반적인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국내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GDP 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
 - 실질경제성장률은 '10년 대비 '11년에 크게 하락
 -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및 기타의 비중이 약 60%로, 이 부문 취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
 - 반면, 농림어업 및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

<표 2-4> 국내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원, %)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GDP, 당해년)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71,282
실질 경제성장률	%	5.1	2.3	0.3	6.3	3.6
산업구조						
농림어업		2.9	2.7	2.8	2.6	2.7
광공업		27.5	28.1	28.0	30.5	31.4
전기가스수도	%	2.2	1.3	1.8	2.0	2.0
건설업		7.4	7.0	6.9	6.3	5.9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1
취업자						
농림어업		7.4	7.2	7.0	6.6	6.4
광공업	%	17.2	16.9	16.4	17.0	16.9
건설업		7.9	7.7	7.3	7.4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실업률	%	3.2	3.2	3.6	3.7	3.4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3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충남지역 경제환경의 변화

- 충남지역 지역내 총생산(GRDP)는 지속적 증가 추세
 - '10년 충남지역의 1인당 GRDP는 3,670만원 수준이고,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
 - 충남지역 '1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국평균을 웃돌고는 있지만, '07년 큰 폭의 하락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업종 중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전국 단위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 부문 취업자 수 비중은 약 60%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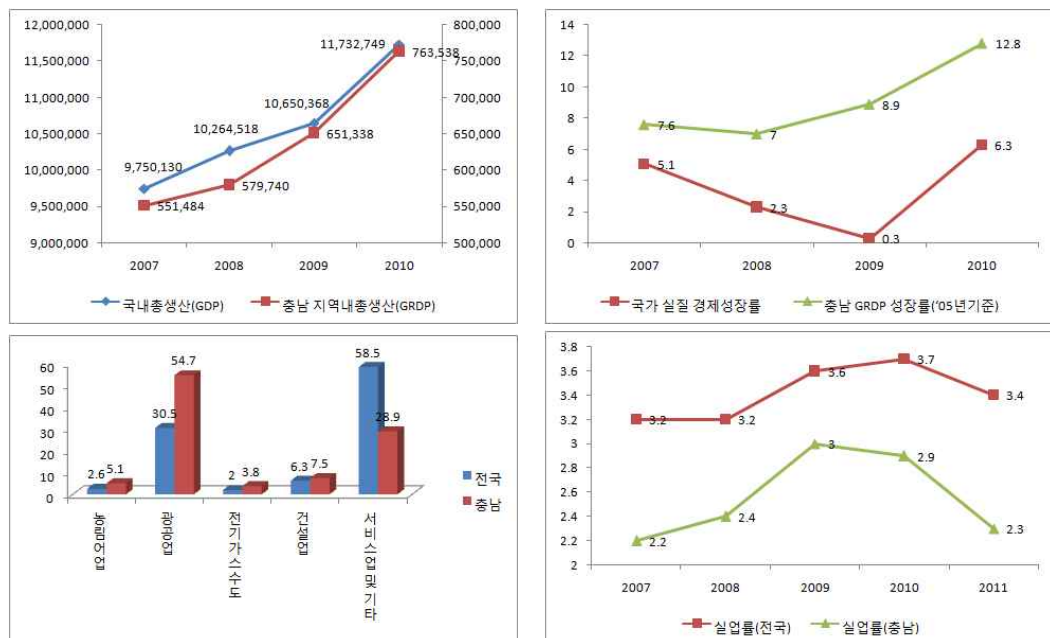
- 충남 북부권의 제조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효과 등으로 고용률은 '07년 감소 이후 '10년 60.4%까지 하락하다가 '11년 들어 소폭 상승 전환

<표 2-5> 충청남도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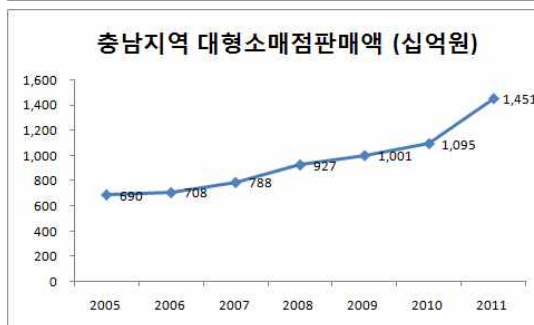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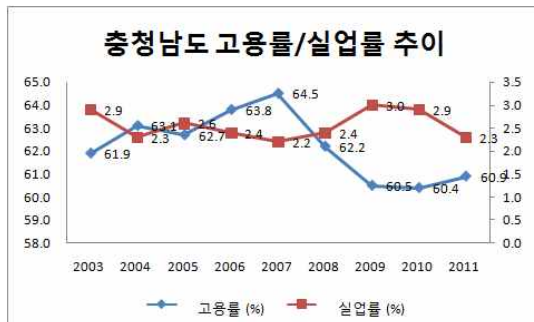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역내총생산(GRDP)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
전국대비 구성비	%	5.66	5.65	6.12	6.51	-
GRDP 성장률('05년기준)	%	7.6	7.0	8.9	12.8	-
1인당 GRDP	천원	28,482	29,826	33,381	36,786	-
산업구조						
농림어업	%	6.7	6.3	5.7	5.1	-
광공업		45.9	47.0	51.0	54.7	-
전기가스수도		4.4	2.5	3.4	3.8	-
건설업		8.7	9.3	8.1	7.5	-
서비스업 및 기타		34.5	34.9	31.7	28.9	-
취업자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건설업		6.6	5.7	5.8	5.6	6.4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실업률		2.2	2.4	3.0	2.9	2.3
경제활동참가율		66.0	63.7	62.4	62.2	62.4
소비자물가상승률		2.5	4.9	2.7	3.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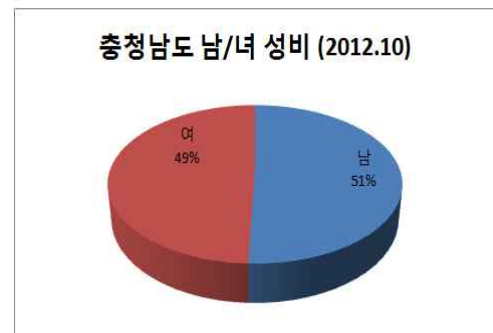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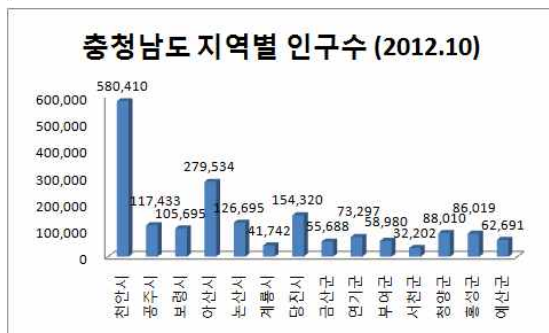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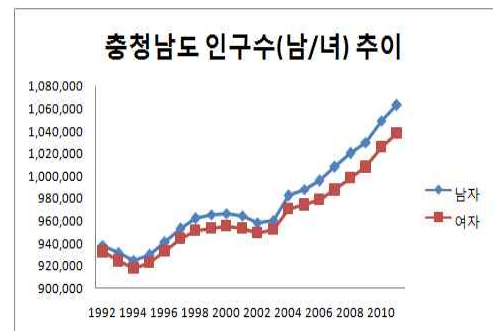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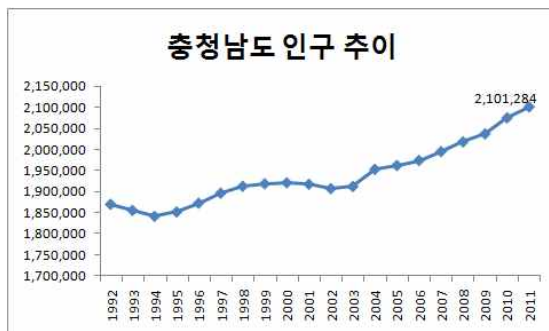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2-1> 국가 및 충남지역 경제지표 비교



<그림 2-2> 충청남도 각종 경제지표 추이



<그림 2-3> 충청남도 지역별 인구수 추이 및 특성

■ 인구변화 추이

- 충남지역의 '11년 말 현재 인구수는 210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지역별로는 개발에 따른 천안, 아산 지역과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계룡시의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공주, 논산 지역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은 5.3%로 경기도(7.5%)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
- 충남지역의 남/녀 성비는 남자 51%, 여자 49% 비중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0%로 향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2. 소상공인 현황

1) 사업체/종사자 통계 현황

- '10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8%가 소상공업체로 분류되고, '10년 기준 소상공업체 종사자 수는 전체에서 약 37.7%를 차지

<표 2-6>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전산업기준(1인이상)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체수 (개)	전체	2,976,646	3,046,958	3,069,400	3,125,457
	소상공인 (비중, %)	2,616,222 (87.8)	2,675,270 (87.8)	2,685,856 (87.5)	2,748,808 (87.9)
종사자수 (명)	전체	12,612,692	13,070,424	13,398,497	14,135,234
	소상공인 (비중, %)	5,102,578 (40.4)	5,194,991 (39.7)	5,217,922 (38.9)	5,333,561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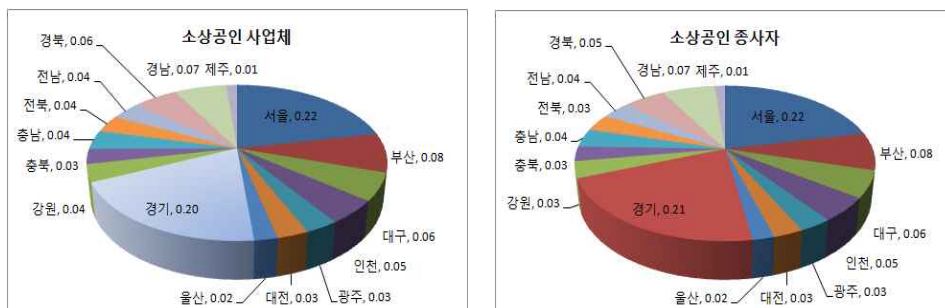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전산업기준(소상공인)

- 충남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은 전국에서 약 4%의 비중을 차지
 - 사업체수는 '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높음.
- '10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지역과 전국 단위에서 큰 차이점은 없음.
 - 다만, 충남지역의 음식숙박업 사업체수의 비중은 26%(전국 21%)로 다소 높고, 동일업종 종사자수의 비중 또한 28%(전국 23%)로 높게 나타나, 충남지역의 음식숙박업의 편중이 타지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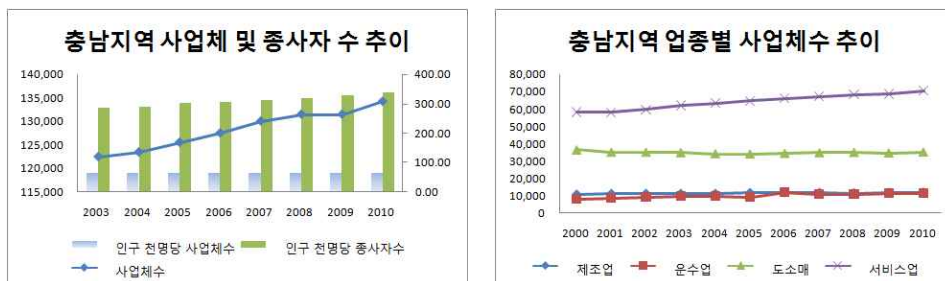
<표 2-7>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소상공업	비중	전체	소상공업	비중
전국	3,125,457	2,748,808	87.9	14,135,234	5,333,561	37.7
서울	693,027	594,352	85.8	3,700,354	1,136,823	30.7
부산	245,380	218,911	89.2	964,117	410,015	42.5
대구	174,165	157,276	90.3	625,151	294,252	47.1
인천	153,618	135,206	88.0	678,008	265,736	39.2
광주	93,016	82,227	88.4	392,047	155,768	39.7
대전	88,964	78,643	88.4	358,709	146,941	41.0
울산	66,741	58,858	88.2	367,045	109,346	29.8
경기	644,799	553,893	85.9	3,109,127	1,164,424	37.5
강원	107,160	98,010	91.5	347,255	181,450	52.3
충북	96,455	86,183	89.4	411,673	162,641	39.5
충남	121,439	108,664	89.5	546,313	206,819	37.9
전북	110,945	100,097	90.2	408,389	185,994	45.5
전남	110,508	100,877	91.3	408,260	191,070	46.8
경북	170,130	154,131	90.6	718,073	288,919	40.2
경남	207,388	184,560	89.0	954,601	363,490	38.1
제주	41,722	36,920	88.5	146,112	69,873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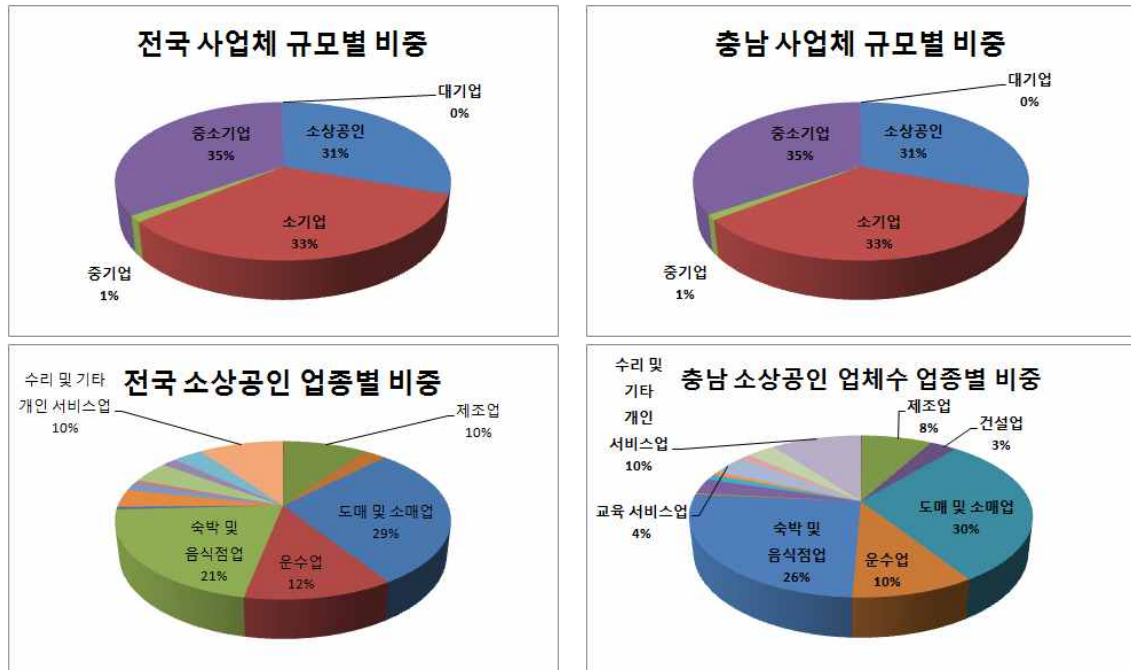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전산업기준(소상공인),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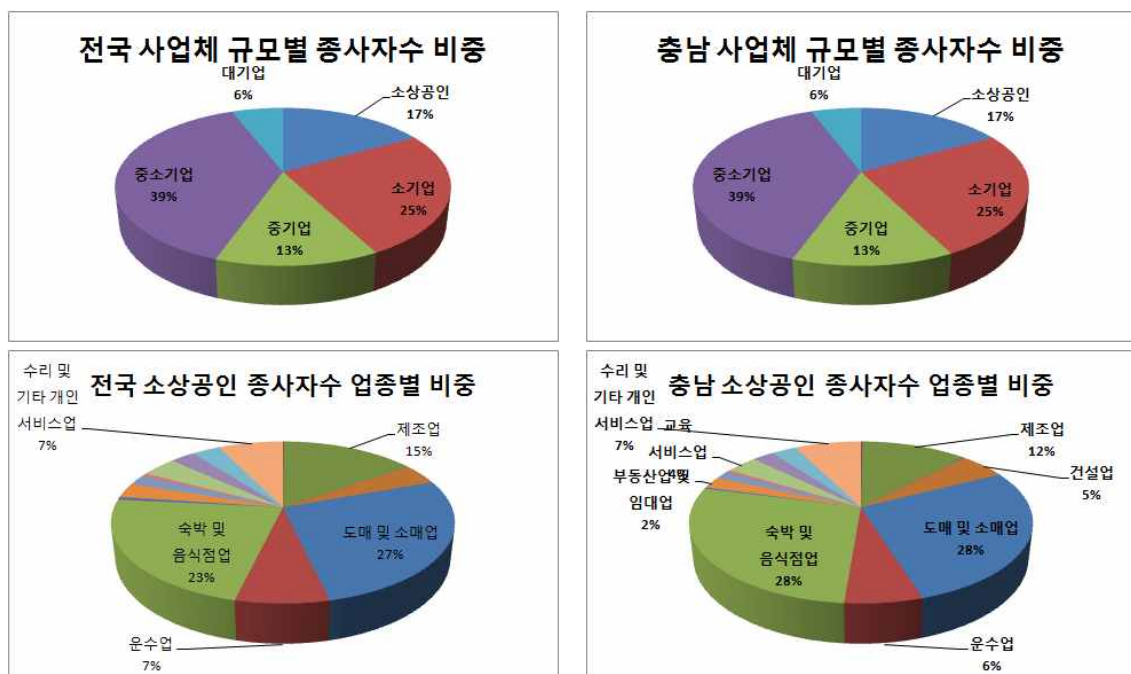
<그림 2-4>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



<그림 2-5> 충남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의 변화 추이



<그림 2-6>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



<그림 2-7>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표 2-8> 업종별,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개

지역	업종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국	전산업	3,125,457	2,748,808	3,002,333	119,999	3,122,332	3,125
	농업, 임업 및 어업	787	240	473	312	785	2
	광업	1,759	1,389	1,737	21	1,758	1
	제조업	325,082	263,194	315,570	8,915	324,485	597
	전기, 가스, 수도사업	389	203	249	124	373	16
	하수·폐기물 처리	4,846	1,907	3,099	1,722	4,821	25
	건설업	96,716	72,916	93,127	3,245	96,372	344
	도매 및 소매업	870,599	785,886	840,305	30,004	870,309	290
	운수업	344,290	334,035	341,565	2,599	344,164	126
	숙박 및 음식점업	633,381	580,537	620,119	13,194	633,313	68
	출판, 영상, 통신서비스업	22,410	11,077	15,535	6,749	22,284	126
	금융 및 보험업	9,933	5,965	7,131	2,674	9,805	12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6,935	97,859	103,106	3,477	106,583	352
	과학기술서비스업	65,832	42,765	56,244	9,267	65,511	321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34,038	21,202	25,155	8,447	33,602	436
	교육 서비스업	142,456	118,953	132,980	9,377	142,357	9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82,256	47,355	71,068	11,167	82,235	21
	여가관련 서비스업	98,579	94,519	97,147	1,383	98,530	49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5,169	268,806	277,723	7,322	285,045	124
충남	전산업	121,439	108,664	117,621	3,733	121,354	85
	농업, 임업 및 어업	81	35	55	26	81	-
	광업	109	71	108	1	109	-
	제조업	11,758	8,627	10,985	711	11,696	62
	전기, 가스, 수도사업	4,203	3,277	4,111	88	4,199	4
	하수·폐기물 처리	34,646	32,410	33,942	703	34,645	1
	건설업	10,982	10,575	10,904	77	10,981	1
	도매 및 소매업	29,457	27,814	29,139	318	29,457	-
	운수업	285	181	239	46	285	-
	숙박 및 음식점업	293	210	239	53	292	1
	출판, 영상, 통신서비스업	3,533	3,358	3,453	72	3,525	8
	금융 및 보험업	1,766	1,280	1,613	152	1,765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81	763	863	318	1,181	-
	과학기술서비스업	4,571	3,914	4,296	274	4,570	1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3,022	1,497	2,574	448	3,022	-
	교육 서비스업	3,590	3,506	3,559	30	3,589	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644	11,035	11,349	292	11,641	3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전산업기준(소상공인), 2010년 기준

<표 2-9> 업종별, 규모별 종사자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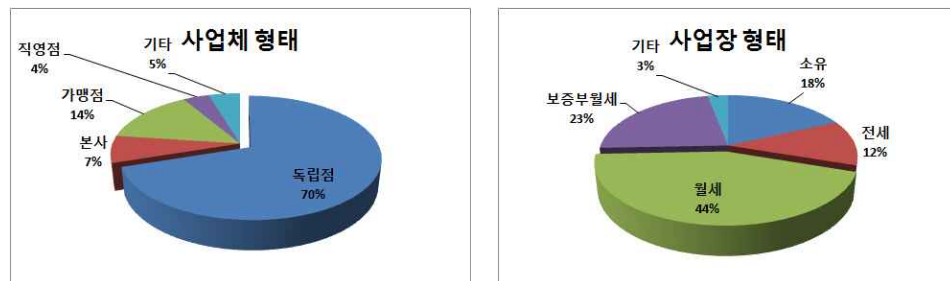
지역	업종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국	전산업	14,135,234	5,333,561	8,056,436	4,206,099	12,262,535	1,872,699
	농업, 임업 및 어업	10,425	588	2,202	7,747	9,949	476
	광업	14,009	4,244	11,380	1,686	13,066	943
	제조업	3,392,737	799,366	1,848,615	886,768	2,735,383	657,354
	전기, 가스, 수도사업	14,645	438	725	7,160	7,885	6,760
	하수·폐기물 처리	58,345	4,903	12,879	41,502	54,381	3,964
	건설업	1,176,098	229,043	634,154	320,142	954,296	221,802
	도매 및 소매업	2,577,813	1,432,932	1,778,600	689,458	2,468,058	109,755
	운수업	930,743	395,394	556,456	287,505	843,961	86,782
	숙박 및 음식점업	1,754,779	1,217,939	1,466,391	257,295	1,723,686	31,093
	출판, 영상, 통신서비스업	379,296	25,072	54,555	235,084	289,639	89,657
	금융 및 보험업	195,347	10,700	18,437	88,928	107,365	87,98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1,832	152,614	186,602	64,616	251,218	40,614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5,580	98,408	183,828	267,573	451,401	184,179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762,573	43,274	69,115	406,939	476,054	286,519
	교육 서비스업	507,437	210,854	300,541	189,908	490,449	16,988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560,559	152,401	302,356	250,177	552,533	8,026
	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	252,760	165,916	182,400	49,833	232,233	20,527
	기타 개인 서비스업	620,256	389,475	447,200	153,778	600,978	19,278
충남	전산업	546,313	206,819	315,121	160,471	475,592	70,721
	농업, 임업 및 어업	793	77	203	590	793	-
	광업	1,138	262	1,045	93	1,138	-
	제조업	214,651	24,584	75,273	73,621	148,894	65,757
	전기, 가스, 수도사업	1,305	43	94	551	645	660
	하수·폐기물 처리	3,795	249	715	2,976	3,691	104
	건설업	36,628	10,886	26,790	8,330	35,120	1,508
	도매 및 소매업	82,957	57,243	66,880	15,846	82,726	231
	운수업	27,363	12,745	19,819	7,086	26,905	458
	숙박 및 음식점업	72,019	57,308	65,434	6,585	72,019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	2,144	396	794	1,350	2,144	-
	금융 및 보험업	2,034	344	527	1,207	1,734	3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275	4,682	5,266	1,348	6,614	661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457	2,852	4,899	3,255	8,154	303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17,320	1,428	2,074	15,246	17,320	-
	교육 서비스업	14,778	7,352	9,756	4,909	14,665	113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21,415	4,970	11,772	9,643	21,415	-
	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	8,316	5,957	6,280	1,782	8,062	254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925	15,441	17,500	6,053	23,553	372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전산업기준(소상공인), 2010년 기준

2) 사업체 특성 현황³⁾

■ 사업현황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상공 사업체는 대체로 5,000만원 이하의 창업자금으로 독립점(단독사업체)을 월세 형태로 운영
-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서 평균 창업비용은 6,570만원(1~3000만원(33.5%), 3,000~6,000만원(32.6%), 6,000만원~1억원(32.5%))이고, 창업비용 중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74.8%



<그림 2-8> 사업체·사업장 형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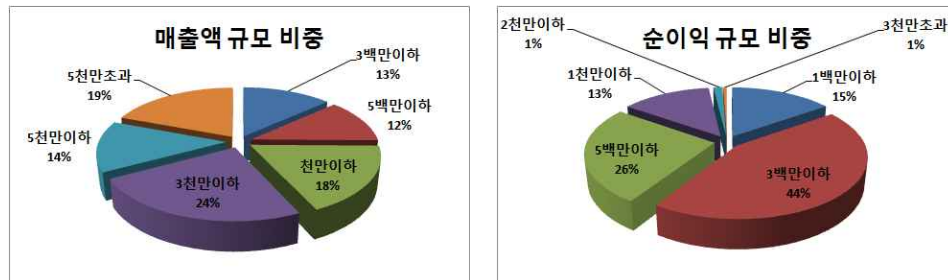
<표 2-10> 업종별 초기 창업자금

구분	초기 창업자금						합계
	1,000만원 이하	1,000~5,000만원	5,000~1억원	1억~2억원	2억~3억원	3억원 이상	
도소매업	19	48	40	20	10	4	141
서비스업	9	31	10	7	1	3	61
제조업	9	28	7	4	2	2	52
음식숙박	3	19	16	8	4	3	53
기타	9	18	7	2	2	2	40
합계	49	144	80	41	19	14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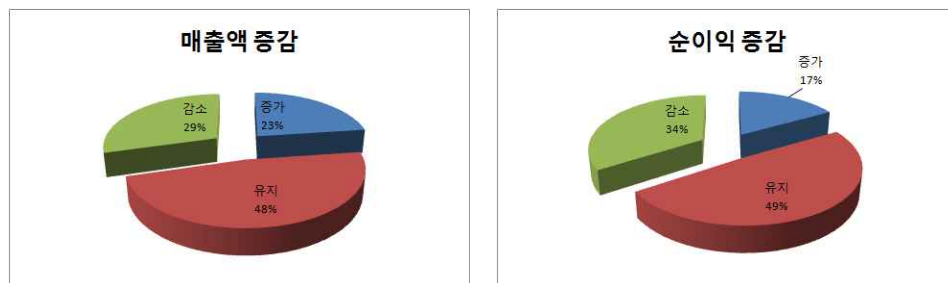
- 월평균 매출액은 대체로 1,000만~3,000만 사이에 분포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서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은 2,829억원이고,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서 월평균 매출액은 990만원
- 월평균 순이익은 300만원 이하의 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영세 소상공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서도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이익은 149만원

3) 본 소상공인 사업체 특성현황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12년)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정리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10년),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조사'(1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부채상황 조사'(12.) 등의 조사분석 결과를 참고하였음.

-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 규모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과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감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
 -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서는 '감소했다'라는 응답이 압도적(73.4%)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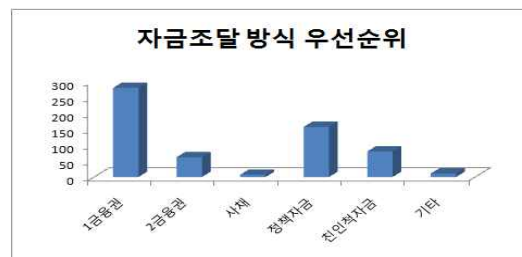
<그림 2-9> 월평균 매출액·순이익 규모 비중



<그림 2-10> 매출액·순이익의 증감

■ 재무(자금조달) 현황

- 소상공인들은 사업운영상 자금조달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자금조달 방식은 제1금융권 대출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정책자금, 친인척 자금, 제2 금융권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2-11> 자금조달 방식 우선순위

-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차선택으로 제2금융권과 친인척 자금조달을 고려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 소규모 기업일수록 제도권 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서도 부채가 있는 소상공인의 82.2%는 금융기관, 친척 또는 친지의 자금,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일수 또는 계의 순으로 자금조달 선택
-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에는 높은 금리 및 담보·보증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금액 부족,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
-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금리를,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정책적 지원 부족과 담보·보증 요구를 선택
- 소상공인들의 부채와 이자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는 소상공인의 84.3%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업체당 부채 평균 금액은 1억 1,364억 원, 통계청 자료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9.2%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이익이 149만원(소상공인진흥원 자료)이고,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월 이자비용이 평균 94만원,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은 3.4% 수준(중소기업중앙회 자료)임을 감안하면 영세 소상공 사업체의 월세와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음.
 - 통계청 자료에서 소상공인의 62.2%는 원금상환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응답
 - 담보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
- 자금사용 용도는 사업자금마련(48.4%), 거주주택마련(23.4%),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18.4%) 순으로 응답(통계청 자료)

■ 사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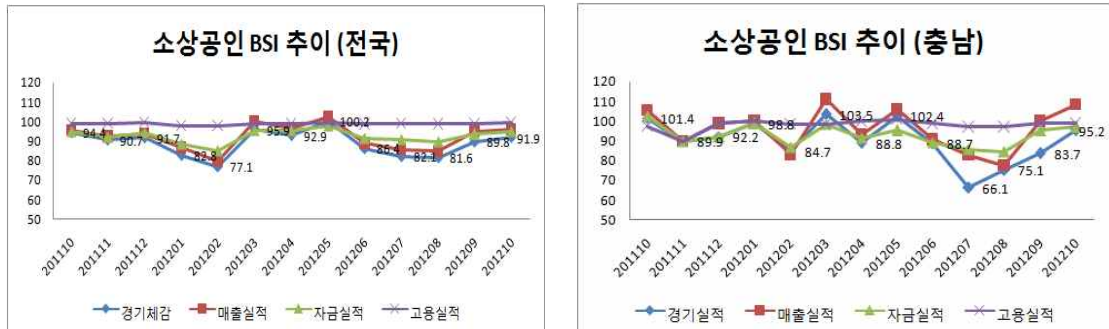
- 소상공인 응답자의 64%는 향후 사업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응답
 -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쟁력 강화(48%), 경기회복(22%), 업종의 긍정적 전망(20%)의 순으로 응답
 - 사업전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경기침체 우려(52%), 경쟁 심화(23%)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경기전망

- 소상공인 각종 실적기준 BSI(Business Survey Index: 경기실사지수)는 최근 소폭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시경제적으로는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지만,

소비심리위축, 대형마트 진출 확대도 주요 원인

- 특히 충남지역의 경기/매출/자금 실적 BSI는 '12.05월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소폭 상승 추세



<그림 2-12>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 추이

제3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제1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배경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배경과 필요성

1) 배경

- 최근 경제의 양극화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소상공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기초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는 물론, 자영업자 개개인의 생활기반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허물어 뜨려 사회불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제약
- 정부는 '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⁴⁾
 - 외환위기 이후 '99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05년 5.31 대책을 통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대
 -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금융, 교육, 컨설팅 및 자활지원으로 사업성공률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로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낮은 자금수요자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요구
 - 은행이 접근할 수 있는 자금수요 기업들의 위험도 정보가 기업 자신들에 비해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경우 부도위험이 높은 기업들만 대출을 받으려 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존재
- 혁신성과 기술기반이 강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의 이윤으로 실현되는 정도 이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데, 민간 금융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음.

4)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육성시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등이 각각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기능을 담당

- 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은 국가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음.
-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특성과 규모의 제약으로 충분한 위험의 분산이 어려움.
- 개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업)의 채무 불이행 정도와 이에 따른 손실액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출 기업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산규모상 그리고 재무자료의 낮은 신뢰도 등의 이유로 위험집중 및 분산에는 한계가 존재

2) 필요성

■ 금융적 측면

- 소상공인은 회계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축적된 정보가 없어 신용정보의 정확도가 높지 않음.
-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를 요구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담보 제공능력도 낮아 금융기관은 자금제공을 기피
-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을 자율적인 시장에 맡기는 경우 자금공급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접근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능력이나 회계정보의 미흡함을 고려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증대하거나 자금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민경제적 측면

- 소상공인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당히 큼.
- 소상공인의 경영기반이 위축되는 경우 국민경제가 흔들리고 나아가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산업 내에서의 가치사슬상 최초시점에 위치하고 있어 중기업, 대기업으로의 원자재 및 부자재 공급자로서의 싹틔줄과 같은 기능을 담당
- 소상공업은 기술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영업권의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기반성이 강하여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사회정책적 측면

-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고용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
 - 소상공인의 쇠퇴는 고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생활 질적 저하의 원인
 -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중년·여성층 등의 고용이 많아 취약계층의 고용 흡수력이 높음.
 - 소상공업이 생계형, 가족형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3) 논리적 근거

-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배경과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1>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리적 근거

	논리적 근거	발생문제 및 대안	
형평성	취약한 경쟁기회 보전	발생 문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높은 고정비용, 열악한 경영자원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무분별한 지원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대안	시장경제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수준을 결정
	지원규모와 시장경제의 상호연관성	발생 문제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배제
		대안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시 다양한 계층의 관점을 고려
효율성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지원	발생 문제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
		대안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
	불완전한 정보 해소	발생 문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거래 위축, 거래 이후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유인 발생
		대안	금융시장의 선별과 감독기능 제고, 신용 및 기술평가 등 정보 비대칭 문제 개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재정리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정

1) 추진과정

- '99년 이후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지원예산 확대
 - '11년 : 기업형 SSM 진출 및 물가안정보험 업소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표 3-2> 시기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태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1997.4.10 제정 - 1998.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준비 	
개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1999.1.18) - 소상공인지원정책자금 개시 (1999.4)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증액 및 신설 (서울, 전남 등) (1999)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2000) - 신용보증기금 생계형창업특별보증 실시 (4조원) (1999~2000) - 소상공인지원센터 증설 (1999.7, 2000, 2002) 총 60개 센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4) -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2005) - 자영업컨설팅 시작 (2005)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기관 위탁외주화사업으로 전환 (2006)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2006) - 장애경제인지원센터 설립 (2006) - 소상공인공제제도 (200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2) 단계별 추진과정

■ 외환위기 이전

-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어 온 정책의 사각지대
 - 소상공인은 업종의 특수성, 정책대상의 방대성, 다양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본원적 해결에는 한계
 - 또한 산업정책적 접근에는 정책수단에 한계가, 사회복지정책으로는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한계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

■ 1998~2002년

-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필요성 대두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기업, 제조업, 상용직 근로에서 퇴출된 인력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서비스업과 소상공인 부문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 심화
- 구조조정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전반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취업난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퇴출된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진입이 쉬운 소상공인의 서비스업종으로 집중
-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외환위기로 기업도산 및 유희인력의 증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실업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을 확대
 - 소상공인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1999.1.18)되었고, 부처별로 창업자금(1999.4)을 지원하기 시작
 - 퇴직자들은 소상공인 부문에서의 창업을 생계해결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음.
- 현안 해결에 치중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이 실업대책으로서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소상공인 부문의 과잉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음식점 등 소상공인 창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지원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 다른 한편으로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소상공인 부문의 치열한 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소상공인 부문의 악순환을 초래
 - * 창업촉진 -> 과잉심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저하 -> 부실화 -> 사업전환 및 재창업 -> 과잉심화 등의 악순환 고리 형성
 -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인력을 소상공인 부문으로의 창업중심 정책이 아닌 임금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추진이 동시에 수반되었어야 함.
- 과잉진입상태에 있던 소상공인 부문이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서민경제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심화
 - 소상공인들의 진출이 다소 용이한 음식 및 숙박업종, 개인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대한 규제조치는 있었지만 과잉진입을 막는데는 미약한 수준
 -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산출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존재

■ 2003~2007년

- 외환위기 이후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소상공인 창업이 확대되면서,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이며,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
 -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확산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2005.1.13)에서 경제양극화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언급
 - 참여정부는 낮은 진입장벽 및 정책대상의 광범위 등 여러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의 다산다사형의 소상공인 생태구조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고 판단
 - 자금 등 시혜적인 직접지원보다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조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
 - 지원대책은 과잉진입 예방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등 대책별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기반인 지역 중심의 지원체제로 대책 추진

■ 2008년 이후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자활기능 강화
 -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여건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계층 대상의 특례보증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조기집행 및 추가조성을 통한 금융여건 개선
 -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 조기 정착
 -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중기중앙회 노란우선)에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협동조합법 개정)
- (창업단계)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유망창업 지원
 - 유망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건립, 운영 추진
 - 소호 등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공간 및 컨설팅, 마케팅, 정보제공 등 토털서비스 시스템 구축

- 08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 후 09년부터 본격 운영 추진
- 해외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유망창업 유도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성공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08년 90개)하여 주요 도시별 창업아이템 설명회 개최('08년 3월) 및 상담 지원, 하반기는 해외 유망아이템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유망아이템 창업 설명책자 발간('08.9~10월)
- 과잉창업 방지 및 준비된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선호하는 업종, 정보 위주로 맞춤형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유용성 제고

○ (성장단계) 경영혁신 역량강화 및 수익성 제고

-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협업화를 통한 자생력 배양 지원하고, 조직화, 협업화의 구심체인 체인본부의 상품기획/매장관리 등 복합적인 소매지원 기능을 보강
-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교육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실시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별 창업교육 실시
- 상인대학, 현장교육으로 상인들의 상거래 기법 개선, 마케팅, 고객관리 교육을 추진
-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 구축 및 운영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정보, 성공사례,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역 소상공인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공통교육, 전문교육, 심화교육 등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화 교육의 필수 이수제를 도입

○ (사업전환 단계) 한계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강화
- 상권정보시스템에 '업종전환 자가진단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업종전환, 품목전환 및 품목추가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 경영개선교육(심화, 전문과정), e-러닝 교육에 폐업절차와 신규아이템 선정 등 업종전환 관련 내용을 보강
- 폐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교육 연계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취업훈련 내용을 포함하고, 폐업 희망자 중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선별하여 고용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 추진

-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강화
-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하여 업종전환 성공가능성을 사전 진단하여 업종 전환의 성공률 제고
- 전문 컨설턴트가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업종변경 등 현장 지도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및 컨설팅 인력을 대상으로 업종전환 컨설턴트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업종전환 상담기능 활성화
- 업종전환 및 재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업종전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및 합리적 산정을 위한 보완대책 수립
- 조세, 규제 등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논의

제2절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현황

1. 정부(중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1) 지원체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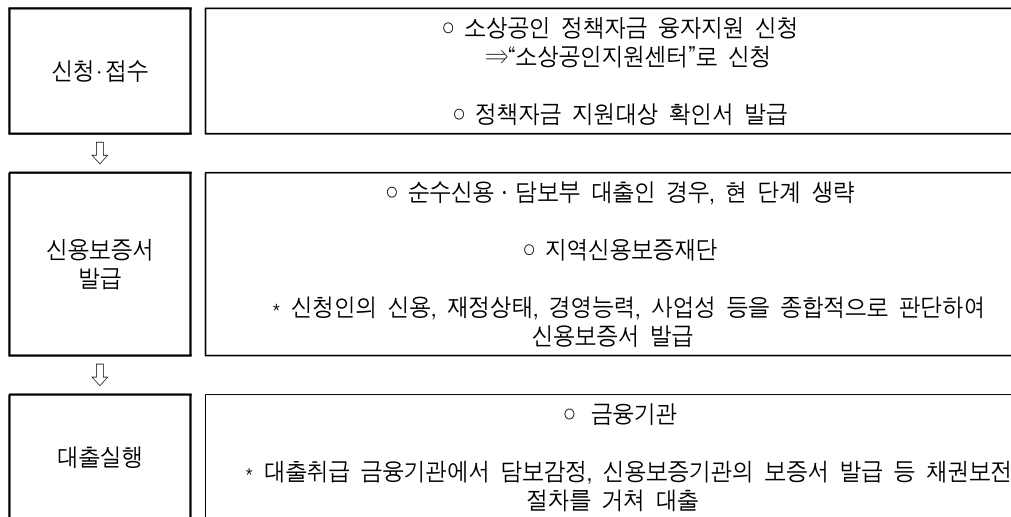
기관	업무분장	비고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계획 수립 · 소상공인지원사업 사업평가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62개소)	·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 컨설팅 수행 · 소상공인지원자금 상담, 컨설팅 확인서 발급	필수 (‘06.04월)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소)	·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 접수 (보증부) · 신용보증서 발급	
협약은행(17개)	·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 접수(신용,담보부) · 채권보전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 중진공 기금차입 요청 및 상환	
중소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지원자금 재원조성(채권발행) · 협약은행에 대한 기금 대여 및 회수	
소상공인지원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계, 관리	

2) 지원방식 및 내용(‘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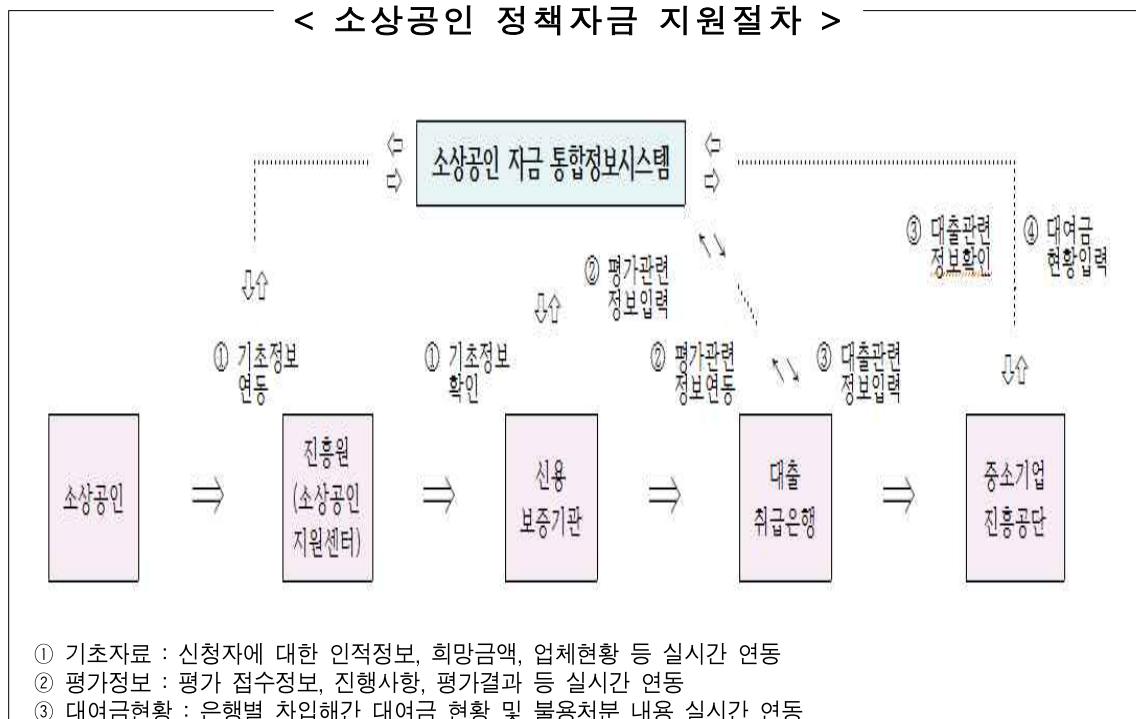
- 운용방식
- 창업 후 경영개선 필요 자금,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 필요 자금 등
-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원(5년간)
 -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13.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59%)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용자절차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자금대출: 19개 대출 취급은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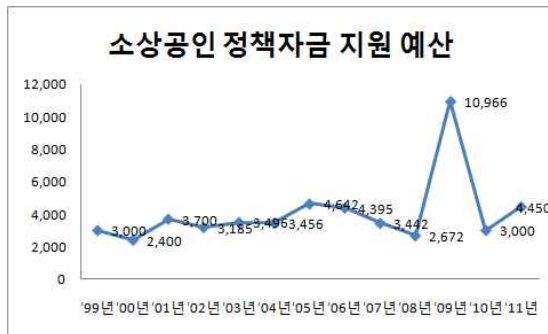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99년 이후 '08년까지 매년 약 3,000~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다가 '08년 금융위기 시 소상공인 경기 안정을 위해 1조원까지 대폭 증가하였고, 최근 다시 4,000억 대로 복귀

<표 3-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추이

(단위: 개, 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예산	3,000	2,400	3,700	3,500	3,500	3,500	5,100	4,552	3,457	2,890	10,967	3,000	4,450
지원업체	14,613	10,518	14,313	10,310	13,914	14,756	19,605	16,300	12,449	8,531	46,457	10,582	15,895
지원금액	3,000	2,400	3,700	3,185	3,496	3,456	4,642	4,395	3,442	2,672	10,966	3,000	4,450



<표 3-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12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예산		지원대상
	'11년	'12년	
우선지원자금	2,614	2,250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수료자, 자영업컨설팅 수료자
정책목적자금	1,836	2,000	특수성을 가진 목적 사업별 지원
	1,468	750	프랜차이즈(60), 시니어(50), 신사업(20), 비법전수지원(20), 장기실업(30), 여성가장(20), 장애인자금(200), 물가안정모범업소(50), 재해자금(일반(200),돌발(100))
	368	800	나들가게로 선정된 슈퍼마켓 점주
	신설	450	제조업 기반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소공인)
합계	4,450	4,250	

주1: '13년은 7,500억(소상공인특화자금 2,500억)으로 대폭 증액

주2: '12년까지 우선지원자금과 정책목적자금으로 구분되었지만, '13년 이후 일반자금과 특화자금으로 구분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7,500억)을 일반자금(3,600억)과 특화자금(3,900억)으로 구분
 - ※ 일반자금: 교육·컨설팅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 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 ※ 특화자금: 제조업위주 소공인, 협업화, 성장유망형, 장애인, 재해소상공인
- 특화자금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450억에서 3,900억)하여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지원
- 일반자금은 지원금액을 분기별로 나눠 지원하여 자금 조기소진의 부작용 축소
 - ※ '13년 1/4분기 지원자금은 신청 하루만에 소진

3) 정책자금 종류

■ 일반자금

○ 교육·컨설팅수료자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소상공인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구분	예비창업자	기존사업자
소상공인 교육과정	20h이상 창업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창업공통과정 12시간 이상	12h이상 창업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창업공통과정 또는 경영공통과정 6시간 이상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컨설팅 이수자	

○ 나들가게 지원

- (지원대상) 2010년 ~ 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프랜차이즈 지원

-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공통 요건 만족시)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니어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①, ②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① 시니어 창업교육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②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여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자문을 15h 이상 수진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사업개발 지원

- (지원대상) 신사업 육성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 (지원대상)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물가안정 모범업소>

1. (목적)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마련
2. (대상) 한식,일식 등 외식업소와 세탁, 이·이미용,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종
3. (주관)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접수 심사 선정
4. (기준) 가격기준 60%, 서비스기준 20%, 공공성기준 20%
5. (혜택) 지정서 교부와 표창,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 정책자금, 자영업컨설팅 우대 등
6. (선정) 각 지자체 및 동장 및 소비자단체 추천→민관공동 현지 실사 후 최종선정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장기실업자 지원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장기실업자 : 최근 3년 이내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②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최근 3년 이내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여성가장 지원

- (지원대상)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특화자금

○ 소공인 특화 지원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용자범위 : 시설 및 운전 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 협업화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13년 하반기 시범)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5년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7년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재해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제3절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현황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1) 지원내용('13년 기준)

- 지원규모: 1,250억 원 ('12년 850억)
 - 분기별 배정: 1분기(400), 2분기(350), 3분기(300), 4분기(200) -> 수시(280)
 - 수시배정: 내포신도시 창업(입주) 소상공인(100),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소상공인(100),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수료자(50), 충남 착한가격업소(30)
-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 내포신도시 창업(입주)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창업·경영개선자금, 충남 착한가격업소,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소상공인
- 대출금리: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 (도에서 1.75~2.0% 이자보전)
- 지원기간
 - 2년: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2.00%)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75%)

※ 단,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신용평가, 담보, 보증

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신청접수: 충남신용보증재단

- '12.8월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원스탑서비스로 일괄처리 (종전에는 소상공인진흥원 충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처리)
-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용자추천과 동시에 신용보증서를 일괄발급 처리

○ 신용보증: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도 소상공인자금의 용자추천을 받은 자
- 특례보증 적용: 보증심사기준 완화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2) '13년 개선내용

○ 지원대상 확대

- '12년까지 정책자금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13년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완제 업체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재신청 가능

○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

-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금리는 거래 은행과 업체 간 자율약정으로 정하여 최대 7.68%까지 부담하던 것을 충남도에서 6개월 간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상한제'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최저 2.85%만 받도록 하였음.
- 대출금리 상한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 대출에 한하며, 전부보증은 가산금리를 2.0%, 부분보증은 3.0%의 가산금리만 내면 되고, 이 중 충청남도에서 1.75%부터 2%까지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에서는 최저 2.85%만 부담

2. 타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 지자체의 정책융자는 지역 내 특정 산업의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으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정책융자는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측면에서 저금리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 신용보증지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강이 목적
-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자체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에 따라 다르며, 직접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해당지역의 현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
- 지원목적은 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시설, 운전), 시장재개발사업지원, 지역특화품목지원 등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직접융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직접 융자하는 방식
 - 지자체는 정책수립, 기금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자금지원 기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업체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접수를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융자 결정 업체를 지자체와 협약한 금융기관에 통보
 - 금융기관은 별도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실행을 하게 되는 대리대출 지원방식
-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은 지자체별로 지원내용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존재
 - 이는 협조융자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식
 - 융자조건은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융자취급 은행별로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자치단체가 1.36%~3.5%의 금리를 보전
- 지자체별 사업유형 및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조건 등은 다음과 같음. (<표 3-6> 참고)
 - 먼저, 서울지역은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1~2%p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의 변동금리로 시설자금과 특별자금을 지원
 - 부산지역은 80억 원의 자금을 약 3%의 변동금리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지원

- 울산지역은 100억 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면서 2%p를 이차보전
- 대구지역은 총 1,500억 원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골목상점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면서 2~3%p의 이차보전을 제공
- 광주지역은 시 차원에서의 특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은 없지만, 광주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2%의 이차보전을 지원
- 대전지역은 50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과 2~4%p의 이차보전을 지원
- 경기지역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위해 4.3%의 고정금리로 45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공인 특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충북지역은 350억원과 2%p의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
- 충남지역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800억원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기금을 위해 50억원의 자금과 1.75~2.0%p의 이차보전을 지원
- 전북지역은 도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950억원의 정책자금을 변동금리 4.4%(1% 이차보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전남지역은 100억원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
- 경북지역은 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
- 경남지역은 250억 규모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4.1% 금리로 운영
- 제주지역은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소상공인 창업,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자금의 경우 2.8%, 우선자금의 경우 3.5%의 이차보전을 실시

<표 3-6>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12년 기준)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서울	시중은행 협력자금		7,500	▪ 3천만원 이하: 2.0% ▪ 3천~1억: 1.5% ▪ 1억초과: 1.0% 이차보전	▪ 5억원	▪ 1년거치 2~4년 균등분 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 시상환
	중소 기업 육성 자금	시설 자금	2,500	▪ 4.0% (변동금리)	▪ 아래내용 참조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특별 자금		▪ 3.0~4.0% (변동금리)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div><시중은행 협력자금> ▪ 지원대상 -제조업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 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 인, 서울형산업영위자,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 애인기업, 중소기업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하이서울 공동 브랜드화 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 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영위자, 산업개발진흥 기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등</div>				<div><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대상(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등 ▪ 지원대상(특별자금) -수해특별자금, 청계천특별자금,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등 ▪ 지원한도 -구조조정사업(8억원), 공장용지임대사업(20억원),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사업 (200억원), 공장 및 사업장사업(50억원), 시장재개 발사업(100억원), 점포시설개선사업(1억원), 중소 기업연구소설립(5억원), 아파트형공장건설(200억 원), 아파트형공장입주(8억원), 산업단지입주지원 (8억원), 벤처기업입주(8억원), 운송업구조개선사 업(8억원), 임시시장설치사업(10억원), 공동창고설 치사업(15억원), 중소기업공동사업(100억원)</div>	
	<div><신청접수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비고> ▪ 900억원은 창업자금으로 지원</div>				<div><교육요건> ▪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보증 인정교육 이수자 * 20시간 교육(장애인기업 15시간) -여성능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타지역 및 신보중앙회, 소상공인지원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30시간 교육(장애인기업 25시간) -한국소자본컨설팅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실시 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div>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부산	소상공인자금	80	3.04%(변동금리)	3천만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부산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우선지원대상: 부산시 창업강좌 또는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p><신청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경제진흥원(051-600-1792) - 부산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자금신청시 1.5배 접수를 받아 그 안에 들지 못 하여도 우선으로 접수하여 자금 지원 <p><교육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대상으로 진흥원 교육 불인정 * 일반지원 소상공인은 교육없이 신청가능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울산	소상공인자금	100	▪ 2% 이차보전	5천만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대상> ▪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자 <신청접수> -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비고> ▪ 우대기업 -착한가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업체 <교육요건> ▪ 해당사항 없음	
대구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소상공인 포함)	1,000	▪ 2% 이차보전 * 우대기업: 3% 이차보전	3억원 * 우대기업 은 5억원	1년 거치 약정상환 (이차보전기간 1년)
	골목상점가 특별금융지원	500	▪ 2차 이차보전 * 1년간 지원	업체당 3천 만원 이내	1년 거치 약정상환 (최대 5년)
	<지원대상> ▪ 대구 소재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골목상점, 모범음식점, 모범전통시장내업소, 착 한가격업소, 우수농산물가공업소 등 <신청접수>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비고> ▪ 보증수수료 0.2~0.5% 감면 <교육요건> ▪ 해당사항 없음	
광주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70	▪ 2% 이차보전	5천만원	1년 거치 약정상환 (이차보전 1년)
	<지원대상> ▪ 광주 북구 소재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건설업, 운수업, 광업 지원 제외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광주북부센터(062-525-2724)			<교육요건> ▪ 해당사항 없음	
대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500	▪ 2% 이차보전(2년지원) * 시 지정 물가안정모범업 소의 경우 4% 이차보전	5천만원 * 중기청, 시자금 등 소 상 공 인 정책자금을 포 함 하 여 산정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대상> ▪ 대전 소재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3개월 이상 영업실적 필요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신청접수> -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4-4502)			<비고> ▪ 회차별(2개월) 100억원 배분 <교육요건> ▪ 해당사항 없음	

지 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경 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창업자금	450	▪ 4.30% (고정금리)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경영개선				
		임차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성남	24	▪ 자금조건에 따름	▪ 5천만원	▪ 자금조건에 따름
		광주	16		▪ 5천만원	
		하남	16		▪ 2천만원	
	특례보증	시흥	4	▪ 시중은행 금리 (이 자 보 전 율 : 0.5~1%)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5년 (1년거치 4년 균등 상환)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	▪ 시험약 금융기관 금리 (이자보전율: 2%)	▪ 업체당 3억원 이 내	-1년상환(일시상환) -2년상환(일시상환) -3년상환(일시상환) -3년상환(1년거치2년균등)
	<소상공인지원자금>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12시간 이 상 이수한 자 -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추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서 소상공인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소상공인특례보증> ▪ 지원대상 -업력 2개월 이상, 관내 사업자 및 거주지가 소재				<시흥시 특례보증> ▪ 지원대상 -시흥시 관내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2개월 경과한 사업자(지원제외업종 제외)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전업률이 30%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시흥시 관내에 공장등록 필하고 가동중인 사업자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교육요건> ▪ 창업자금의 경우 창업교육 이수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충북	소상공인지원자금	350	▪ 2% 이차보전	5천만원 * 중기청, 시자금 등 소상공 인 정책자금을 포함	▪ 3년 일시상환
	<지원대상> -충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신청접수> -충북신용보증재단(043-236-2691)			<비고> -1차(2월): 100억원, - 2차(5월): 100억원 -3차(8월): 75억원, - 4차(10월): 75억원	
충남	창업 경영개선자금	800	▪ 1.75~2.0% 이차 보전	3천만원	2년 거치 일시상환 (2.0% 이차보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금	50		5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분 (1.75% 이차보전)
	당진시 소상공인특례자금	12	▪ 4.9%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원금균등분할)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금> ▪ 지원대상: 충남도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충남 청년 CEO 교육 수료자			<신청접수>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 <교육요건> ▪ 청년창업자금 지원대상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충남 청년CEO교육 수료자 -충남 경제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 TP * 진흥원 교육 불인정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전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50	변동금리 4.4% (1.0% 이차보전)	▪ 시설: 7억원/운전: 3억원 (소상공인 점포개선 5천만원)	시설: 3년거치 5년 운전: 1년거치 2년
	정읍시 영세소상공인특례 보증		1	4% 고정금리 (초과분 시보조)	▪ 1천만원	1년거치 4년 균등 상환
	고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	4% 이차보전	▪ 2천만원 (3명이상자녀가구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순창군 시설개보수 사업보조금		4	은행협약자금 (4% 이차보전)	▪ 보조금 2천만원 (총사업비의 50% 범위내) 협약자금 1억	3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13	2%	▪ 중소기업: 1억 ▪ 소상공인: 3천만원	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소상공인 <각 지역 내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시/군 내 거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각 지역 관청	
전남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	1.5% 이차보전	2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창업 자금	광양	15	3% 이차보전, 보증수수료(2년 간)	3천만원	2년 거치 일시상환
		곡성	50	4% 이차보전, 운영자금 6% 보 전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환경개선자금 5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1천5백만원 이내	3년 거치 7년 이내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이내
		화순	115	3% 이차보전	2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나주	20	1.5% 이차보전	3천만원	3천만원 이내 금리 1.5% (2년거치 4년분할)
		해남	0.8	5% 내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100 만원이내 지원	이차보전: 2백만원 한도 보증수수료 1백만원 이내	자금 종류별 다름
		장성	1	3%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100 만원이내 지원	3% 이차보전	5천만원 이내 금리 3% (3년거치 일시상환)
	장성 창업소상공인 점포임대료지원		0.5	점포당 5백만원 이내	5백만원	직접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 지원대상 - 도/지역내 소재 영업장 보유한 2년 미만 소상공인 - 최근 2년 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 이수자 -업력 5년 미만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소상공인지원 센터의 경영컨설팅 이수 사업자 <각 지역 내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시/군 내 거주 소상공인				<신청기관> - 전남 중소기업지원센터 - 각 지역 관청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경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4	2% 이차보전 (1년)	보증한도내 (최대 3천만원) * 우대업체: 5천만원 (고용창출 우수, 장애인업체)	1년거치 4년균분상환 (이차보전금 분기별 분 할지원)
	▪ 지원대상 -도내 소재의 소상공인			<신청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남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50	4.1%	1억원	1년거치4년균분상환 (이차보전금 분기별 분 할지원)
	중소슈퍼마켓 특별자금	50	4.1%	1억원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창원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3.75	2.5% 이차보 전(1년)	사업개시일 기준 6개월 이 내: 5천만원 6개월 경과시: 2천만원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지원대상 -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소슈퍼마켓 특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6개월 이상 - 매장면적 300m^2 이하 - SSM 입점 또는 반경 1km 이내 *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점포는 SSM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지원대상			<신청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우선지원대상> - 11년 도민 무료 창업강좌 수료자 * 도자금으로 운영된 센터 내 교육 * 진흥원 교육 불인정	
제주	창업 및 경쟁력 강 화자금	5,000	일반: 2.8% 이차보전 우대: 3.5% 이차보전	1~100억원 (업종별 차등지원)	3~10년
	경영안정자금			2천~4억원 (업종별 차등지원)	2년 일시상환 (1회에 한하여 2년 연 장)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대상 -제조, 유통, 건설(아파트형 건설사업자), 제주로 이 전하는 기업(본사공장 또는 연구소), 고용우수인증기 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조산원,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목욕장, 숙박(객실 15개 이상), 우선방송, 주차 장운영(20대이상), 축산업(소, 돼지), 양계업, 육상양 식업 등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이노비 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재해 및 재난피해기업, 건 설업, 관광관련업, 수출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업, 기타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신청기관>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주신용보증재단 ▪ 경영안정자금 -제주 시청 지역경제과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식 비교

1) 정책자금 지원방식

■ 직접대출

- 정부/지자체에서 직접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
 - 정책자금 지원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지 못함을 의미
 - 은행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적정 거래비용을 보전받고 정부/지자체가 심사·선정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만 신용위험부담은 은행이 지게 되므로, 은행은 정부/지자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고성장 분야 또는 창업기업 등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대한 대리대출 실행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자연히 정책자금의 정책적 기능은 약화되게 되기 때문

■ 이차보전

- 정책당국이 대상자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을 지정하고 금융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차입자를 선정하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재정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
 - 이차보전 방식은 정책당국이 조건을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조건 충족 여부와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자금을 대출하되 이자의 일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수단
 - 이는 차입자 선정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의 장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차입비용을 낮춰주는 효과
 - 또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므로 금융회사가 대출대상 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정부가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음.
 - 정부의 재정부담 측면에서도 정책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금융회사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사업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
 - 하지만, 차입자 선정에 있어 금융회사가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금융회사가 손실 부담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도 병존

■ 간접대출(on-lending)

- 정부/지자체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회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
 - 특정 정책대상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대출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지자체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수단
 - 이 방식은 민간금융회사의 심사, 집행, 사후관리를 활용하는 간접지원으로서 시장친화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장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되 미리 선정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게 대출할 것을 요구
 - 하지만 대출사고의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직접대출 방식의 정책자금과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부도위험이 작은 양호한 기업에게 대출을 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
 - 따라서 이러한 간접대출 방식의 성패는 온렌딩 대출 운용실적 분석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간접대출의 효과성을 제고

■ 신용보증(credit guarantee)

- 신용보증은 정책당국이 설정한 여건에 맞는 차입자 중 대상자를 금융회사가 직접 선정하고 대출을 실시하며 정책당국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 신용보증은 차입자금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상환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수단
 - 이는 상환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회사나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 정책수단

2)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특성

- 이들 수단들은 시장실패 보완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라는 본연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자금공급 방식은 정책당국이 자금공급자로서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와 기존 자금공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
- 특히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경우 효율성과 시장친화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반면,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는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정책적 개입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손실보전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야기
- 따라서 정책금융의 집행에서 시장 매커니즘의 활용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어떤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
 - 따라서 민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미진할수록 정책당국이 직접 자금배분에 관여하는 방식이 선호되게 되는데,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영리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 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정책당국이 자금배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
 - 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참여가 민간금융시장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반론도 존재

3) 현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문제점

- 협약은행에서 담보감정,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을 결정
 - 은행 대출의 특성상 사전적으로 대출채권이 보전될 수 없는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없음.
- 사후관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경영지도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현재 추진체계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가 쉽지 않음.
 - 소상공인의 수에 비해 지원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
- 정부/지자체의 각 지원사업의 세부 조건 및 자격은 상당히 유사하여 중복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창업자금지원은 정부가, 경영개선자금지원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의 지원 목적별로 정부/지자체의 역할의 구분
 - 단순 사업의 통폐합보다는 각 지원제도의 연계 혹은 집행 방법의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수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는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

4. 지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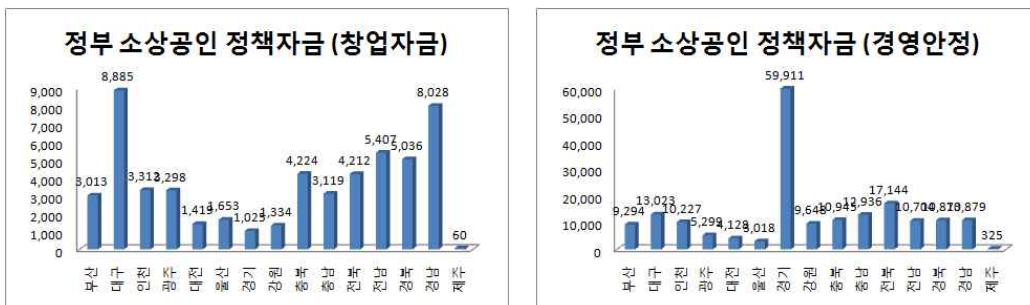
- 대체적으로 창업자금보다 경영개선자금의 수혜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 규모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들은 충분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 규모는 크지 않음.
 - 창업자금 지원액은 대구와 경남지역에서 높고, 경영개선자금은 경기 지역에서 높음.

<표 3-7>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지역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	-	-	-	-	-	119	1,714	40	1,790	3,192
부산	6,038	25,522	5,997	3,918	3,013	5,869	59,733	9,569	9,349	9,294
대구	7,324	33,303	9,020	9,433	8,885	5,937	42,713	8,319	10,841	13,023
인천	4,302	17,807	5,988	7,033	3,312	10,232	49,072	11,902	13,969	10,227
광주	4,854	17,844	8,582	5,391	3,298	5,400	33,831	10,222	18,884	5,299
대전	1,199	7,778	3,057	2,459	1,419	3,179	29,741	9,387	11,010	4,128
울산	2,125	5,365	2,398	2,879	1,653	5,196	15,698	5,302	6,677	3,018
경기	459	1,084	240	871	1,025	25,184	140,629	23,109	52,025	59,911
강원	1,457	3,790	1,338	1,358	1,334	12,350	23,217	7,596	13,347	9,648
충북	2,881	15,125	4,722	4,295	4,224	3,971	43,807	8,542	14,037	10,945
충남	4,081	11,316	4,360	5,398	3,119	15,221	70,302	14,059	22,228	12,936
전북	1,570	4,344	1,648	1,776	4,212	5,706	46,182	12,252	12,089	17,144
전남	3,000	9,352	5,140	7,757	5,407	4,744	24,494	6,473	14,099	10,704
경북	3,759	19,447	6,978	7,238	5,036	5,214	58,706	14,808	17,897	10,873
경남	6,409	20,000	4,438	8,555	8,028	8,587	49,224	7,405	11,834	10,879
제주	36	192	100	149	60	143	1256	141	399	325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DB



<그림 3-1> 지역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12년 기준)

<표 3-8>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지역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	-	-	-	-	-	39	-	-	-	-
부산	1,187	3,157	3,420	1,797	2,213	2,445	8,001	6,366	5,426	7,898
대구	-	137	10	-	-	-	150	26	-	20
인천	-	-	-	46	-	-	-	-	102	-
광주	-	-	-	-	-	-	-	-	50	-
대전	-	365	480	26	506	7,788	30,595	13,122	26,452	38,069
울산	-	10,657	20	-	2,485	-	31,251	180	-	7,518
경기	7,028	16,213	13,936	15,845	12,251	4,443	20,760	24,343	19,177	19,896
강원	-	10	-	-	20	-	20	10	-	-
충북	-	145	-	90	-	169	580	-	20	-
충남	2,187	11,310	13,898	12,774	12,249	6,739	38,905	41,338	32,095	47,193
전북	-	-	-	-	26	-	-	-	-	26
전남	2,117	5,315	4,548	6,754	6,391	60	110	34	391	422
경북	-	-	-	-	6,503	-	-	-	-	14,288
경남	2,648	1,978	2,775	6,813	4,775	4,101	6,317	6,243	9,743	17,630
제주	-	40	-	-	-	-	265	-	-	30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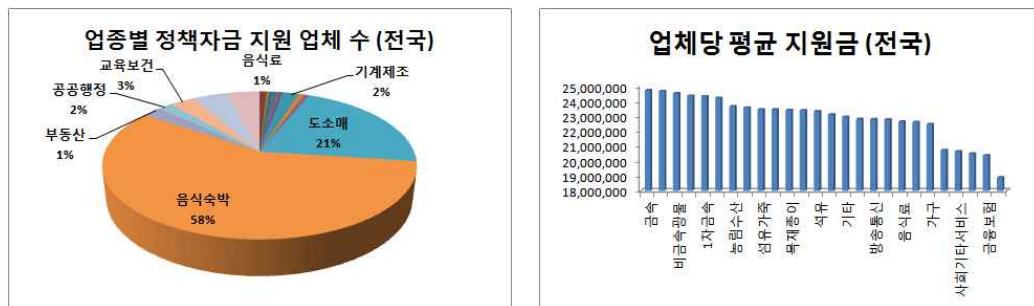
-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지자체별로 프로그램이나 특성에 따라 차이
 -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규모도 창업자금보다는 경영개선자금이 더 큼.
 -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지원액 비중을 보면 주로 음식숙박업(58%)과 도소매업(21%)의 비중이 높음.
 - 충남지역의 업종별 정책자금 지원도 주로 음식숙박업(34%)과 도소매업(18%)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9> 업종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통계

(단위:개, %, 원)

업종	전국			
	업체수	비중(%)	평균 지원금	표준편차
농림수산	131	0.06	23,627,710	10,925,779
광산	-	-	-	-
음식료	1888	0.81	22,612,288	10,636,729
섬유가죽	972	0.42	23,428,621	10,583,273
목재종이	462	0.20	23,387,121	10,347,341
인쇄	894	0.38	22,578,501	10,571,525
석유	5	0.00	23,300,000	6,723,095
화학	461	0.20	24,653,796	12,605,827
비금속광물	357	0.15	24,500,420	12,654,372
1차금속	223	0.10	24,304,260	10,589,445
금속	1,249	0.54	24,709,421	11,175,085
기계제조	4,748	2.04	24,198,825	11,260,927
전기전자	1,542	0.66	23,548,949	10,369,961
의료정밀	288	0.12	24,336,632	10,547,616
전력가스	533	0.23	20,718,750	8,855,209
가구	24	0.01	22,450,281	9,308,976
건설	626	0.27	23,373,930	10,744,225
도소매	48,701	20.90	23,423,118	11,074,737
음식숙박	134,314	57.64	22,785,550	10,796,627
운수보관	2,960	1.27	18,893,818	8,286,189
방송통신	200	0.09	22,773,750	10,660,522
금융보험	33	0.01	20,365,152	10,313,564
부동산	1,753	0.75	20,478,665	9,370,853
공공행정	4,256	1.83	23,091,753	11,981,396
교육보건	6,835	2.93	22,754,868	10,794,800
사회기타서비스	10,202	4.38	20,631,307	9,831,225
기타	9,377	4.02	22,936,387	10,273,738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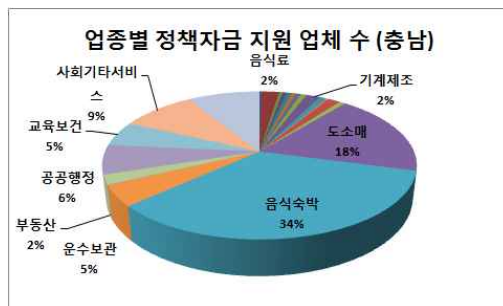
<그림 3-2> 업종별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 및 평균 지원금(전국)

<표 3-10> 업종별 충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통계

(단위 :개, %, 원)

업종	충남			
	업체수	비중(%)	평균 지원금	표준편차
농림수산물	19	0.21	24,039,474	9,375,746
광산	-	0.00	-	-
음식료	194	2.19	25,295,619	10,427,025
섬유가죽	43	0.48	26,046,512	10,063,378
목재종이	38	0.43	25,460,526	10,355,428
인쇄	58	0.65	23,353,448	10,561,436
석유	-	-	-	-
화학	49	0.55	24,739,796	10,526,994
비금속광물	38	0.43	28,296,053	10,640,923
1차금속	12	0.14	23,270,833	8,172,472
금속	67	0.76	24,104,478	8,856,297
기계제조	152	1.71	24,769,737	10,119,672
전기전자	78	0.88	24,038,462	9,949,554
의료정밀	23	0.26	25,234,783	8,773,973
전력가스	4	0.05	21,375,000	8,615,635
가구	130	1.47	23,026,538	10,163,245
건설	65	0.73	26,334,615	11,067,996
도소매	1,613	18.18	25,283,726	11,128,108
음식숙박	3,035	34.21	21,714,957	9,584,175
운수보관	403	4.54	18,914,516	8,176,586
방송통신	8	0.09	21,812,500	11,045,159
금융보험	2	0.02	10,000,000	0
부동산	183	2.06	19,372,131	7,942,490
공공행정	572	6.45	22,170,892	9,240,346
교육보건	486	5.48	22,601,811	9,692,319
사회기타서비스	810	9.13	19,640,802	8,635,171
기타	790	8.90	21,803,038	8,616,208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업종별 재정리



<그림 3-3> 업종별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 및 평균 지원금(충남)

<표 3-11> 충남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통계

(단위:개, %, 원)

지역	업체수(개)	비중(%)	평균 지원금(원)	표준편차
계룡시	180	1.09	21,748,583	8,552,091
공주시	636	3.86	22,946,934	10,361,421
논산시	100	0.61	24,885,500	11,767,203
당진군	652	3.96	24,665,644	11,569,208
보령시	338	2.05	23,673,225	9,451,509
부여군	147	0.89	21,456,660	10,212,462
서산시	812	4.93	23,089,286	11,139,184
서천군	138	0.84	24,023,551	11,229,876
아산시	1,614	9.79	21,794,981	9,350,663
연기군	5,989	36.33	22,573,832	9,768,878
예산군	248	1.50	23,041,331	10,868,884
천안시	3,732	22.64	22,248,039	9,406,133
청양군	73	0.44	22,432,877	8,301,297
태안군	183	1.11	23,363,661	10,628,478
홍성군	406	2.46	23,316,626	10,416,063
기타	1,237	7.50	23,128,981	10,284,428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그림 3-4> 지역별 업체수 및 평균 지원금(충남)

- 충남 지역 내에서는 주로 연기군, 천안시에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 비중이 높음.
- 업체당 평균 지원금은 논산시, 당진군, 서천군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4절 외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1. 외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 경제환경에 따라 소상공인은 신용경색 및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외국 각국은 정책금융기관의 직접대출, 신용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 직접대출의 경우에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위기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신용보증지원은 한도 확대, 만기 유예 등의 방식으로 지원

1) 미국의 정책금융

■ 개요

- 금융지원 중심에서 각종 행정서비스 및 정보제공, 인프라 보완 위주로 전환하는 추세로 발전해 왔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폐지하고 융자보증을 확대
 - 미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금융지원은 직접 대출과 보증대출로 구성된 가운데, 대부분은 보증대출로 일반시중금융기관을 통해 집행
 - 미국식 모델은 제도 운용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건전하고 선진화된 금융 및 은행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특징

- 금융위기 초기에는 모기지론 확대 등과 같이 주택부문에 주로 대응하다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불안이 심화되자 대대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 미국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신용보증 확대로 전환
- 자금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대출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보증대출로 일반금융기관을 통해 집행
 -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업종이나 희망 상환기간 등에서 신청 금융기관의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국가의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경기회복 및 재투자법과 소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중소

기업 지원을 강화

- 2010년 9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세금혜택과 용자를 지원하는 소기업지원법(Small BusinessJobs Act)을 제정
- 중소기업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에서 한도 및 보증비율을 늘리고 특별보증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
- 용자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을 우대(preferred lenders), 인정(certified lenders), 일반(general lenders)으로 구분하여 우대 금융기관의 경우에만 금융기관에게 보증절차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인정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SBA가 보증심사 기능을 직접 수행
- 주정부의 보증제도 운영은, 주정부 조직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와 공사 형식의 별도 조직을 통해 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독립 채산제 형식으로 책임을 강화하여 손실 발생을 최소화

<표 3-12>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특별보증 프로그램

구분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특별보증(Business Stabilization Program)
운영기간	2009.3~2010.9
예산	255백만달러(3,900억원)
보증한도	35,000달러
대출용도	기존 사업자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용도
보증비율	전액보증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금리	SBA가 대출기간동안 전액 이자 지원

- 미국식 모델은 심사기능을 위한 큰 규모의 조직이나 보증기관의 공신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적인 대규모 물적 기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제도 운용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건전하고 선진화된 금융 및 은행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제약요인이 존재
- 미국의 용자보증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고 기업신용평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보증부 대출을 재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시장 같은 2차 자본시장이 대출 보증시장을 뒷받침

<표 3-13> 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의 운용실적(승인금액)

(단위: 백만 US\$)

연도	7(a)일반보증	504/CDC	SBIC보증채권	SBIC참여채권	기타	합계
2007년	14,479	6,462	759	0	0	21,701
2008년	12,819	5,418	1,029	0	0	19,268
2009년	9,263	3,912	793	0	0	13,970
2010년	12,425	4,512	1,164	0	0	18,102
2011년	19,703	4,623	1,839	0	0	26,166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표 3-14> 미국 중소기업청 보증의 운용실적(대출잔액)

(단위: 백만 US\$)

연도	7(a)일반보증	504/CDC	SBIC보증채권	SBIC참여채권	기타	합계
2007년	46,085	19,586	2,358	6,050	1,094	75,174
2008년	47,689	22,332	2,689	5,797	812	79,322
2009년	48,563	24,129	3,134	5,244	681	81,753
2010년	50,847	25,517	3,759	4,374	589	85,087
2011년	56,438	26,578	4,533	3,469	500	91,520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 일본의 정책금융 지원 내용

■ 개요

-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정책자금지원과 신용보강제도로 구분
 - 금융은 정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전담하고 경영지원과 신용보강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담당

■ 특징

- 일본은 금융시장안정대책과 함께 경기부양대책도 실시
 - '08.10월에는 국민생활 안정, 지방정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9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생활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2조엔), 비정규 노동자 취업센터 증설 등 고용안정망 강화(1조엔), 지방 인프라 정비에 위한 교부금 신설(2조엔) 등에 예산 배정
 - '08.12월에는 고용지원,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신설 등에 총 4조엔 규모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한시적으로

- 0.4%p 인하, 정직 및 해고 노동자에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에 보조금 지급
- 2009년 4월에는 고용안정, 성장전략 추진 등에 33.4조엔 규모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경제위기대책')을 마련하여 직업훈련생 생활비 지원, 고용조정지원금, 에너지 절약형 산업 육성을 위한 에코포인트제도 지원, 신차 구입 지원 등이 포함.

■ 지원내용

- '08.10월 이후 금융기관 자본확충, 보유자산 매입, 국책금융기관 대출한도 및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세 차례에 걸쳐 마련
 - 금융시장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08.10월 '생활대책', '08.12월에는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09.4월에는 '경제위기 대책'을 각각 발표
- 일본공고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융자지원, 신용보험지원, 증권화 지원으로 크게 구분
 -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 발행 사채의 취득,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및 설비대여기관에 대한 대출 등을 포함하며, 지원 규모는 '11년 기준 2조 470억 엔에 달함.
 - 신용보험지원은 일본공고가 신용보증협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협회에 대하여 보증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지원이며, 신용보험인수 규모는 '11년 11조 1,313억 엔에 달함.
 - 증권화 지원사업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채권을 증권화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무담보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 위기 대응 및 금융안정화 시책으로 일본공고의 융자지원 공급과 신용보험 공급이 '09년에 크게 증가
 - 위기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융자지원과 공급을 크게 '09년 지원을 크게 증가시킨 이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소
 - '10년 이후 융자지원 공급과 신용보험 공급이 '0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임.
 - 위기극복을 위한 기능 요구가 축소된 다음에는 일본공고의 평상시 기능으로 복귀
 -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지원, 시설자금 위주의 지원 등 평상시의 기능으로 회귀
- 일본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조달하기 어려운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 대출지원의 주요 사업은 신사업육성대출, 기업활력강화대출, 환경·에너지 정

책대출, Safety-Net대출, 기업재생대출로 구분됨.

- 중소기업 지원 사업별 지원 실적은 '11년을 기준으로 일본대지진 지원이 1조 2,155억 엔으로 가장 높은 비중(59.4%)을 차지하고 있으며, Safety-Net 지원이 4,046억엔으로 19.8%의 비중을 보였으며, 기술활력강화(11.0%), 신사업육성(4.0%)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본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자금의 만기는 '11년 기준으로 5년 이상이 전체의 50.9%를 점유하고 있으며, 3~5년이 44.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공고의 중소기업 대출은 대부분 직접대출이며, '11년 대출잔액 기준으로 업종별 대출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48.7%, 도소매업이 17.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기준 용도별 대출잔액을 보면 운전자금이 65.6%, 시설자금이 34.4%를 보이고 있으며, 대출기업수는 4만 6,599개이며 기업당 평균대출액은 1억 3,700만엔임.
- 대출규모를 보면 3,000만엔 이상인 경우가 54.9%를 차지

<표 3-15> 일본공고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엔)

업종	2009년	2010년	2011년
제조업	30,073(48.7)	31,371(48.8)	31,328(48.7)
건설업	3,281(5.3)	3,299(5.1)	3,270(5.1)
도소매	10,254(16.6)	10,890(16.9)	10,988(17.1)
운수·통신	5,400(8.8)	5,689(8.8)	5,808(9.0)
서비스	6,547(10.6)	6,868(10.7)	6,972(10.8)
기타	6,151(10.0)	6,164(9.6)	5,953(9.3)
합계	61,706(100.0)	64,283(100.0)	64,322(100.0)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 추이를 보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08년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08년 보증공급은 19조 5,811억엔으로 전년 대비 50.3% 증가했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0년에는 14조 1,723억엔을 공급
- 신용보증잔액은 2001년 37조 120억엔에서 2007년에는 29조 3,682억엔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35조 8,507억원으로 크게 증가
- 대위변제액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2008년과 2009년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임.

- 운용배수는 25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11년 3월말 현재, 전체 중소기업의 약 37.5%에 해당하는 약 157만개 기업이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대출의 약 14%가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

<표 3-16> 일본 52개 신용보증협회의 운용실적

(단위 : 억 엔)

구 분	기본재산 (A)	보증잔액 (B)	보증공급	대위변제	운용배수 (=B/A,배)	보증이용률(%)	
						업체수	금액
2001년	14,002	370,120	132,258	12,350	26.4	44.9	11.7
2002년	13,670	331,885	140,427	12,604	24.3	42.7	11.3
2003년	13,445	311,022	151,964	10,217	23.1	39.8	11.9
2004년	13,437	297,433	131,629	8,279	22.1	37.5	11.7
2005년	13,637	287,964	129,802	6,871	21.1	35.3	11.3
2006년	13,949	292,661	136,591	6,852	21.0	37.3	11.3
2007년	14,278	293,682	130,273	7,943	20.6	37.5	11.4
2008년	14,388	339,192	195,811	10,358	23.6	37.4	13.4
2009년	14,263	358,507	166,252	11,420	25.1	37.9	14.2
2010년	14,856	350,683	141,723	9,366	23.6	37.5	14.0

3) 독일의 정책금융 지원 내용

■ 개요

- 독일 연방차원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KfW 산하의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시행
 - 전후(戰後) 독일 KfW과 조정은행(DtA)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3년 통합
 - 연방정부와 주정부 산하 공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탁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 위탁관리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음.

■ 특징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창구는 Hausbank라 불리는 일반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이 맡고 있으며, 지원기관인 KfW에서 Hausbank에 대하여 채용자나 위험분담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은 주거대 은행인 Hausbank에 대출을 신청하고 융자받으며, 일정 비율의 은행자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음.
 - Hausbank는 KfW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자문, 사업성평가, KfW 대출의 우선변제, 대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KfW는 의무 이행을 점검하여 위반하였을 경

우 변제부담 면제 철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Hausbank는 중소기업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최종 책임을 부담하며, KfW로부터 중소기업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변제 의무를 40~60% 면제 받는 형태로 위험을 분담
- 이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반대출인 경우 변제 의무가 100%
- 이러한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측: 접근 편의성, 장기자금 조달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정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보장 등
 - Hausbank: KfW와의 비경합성, 취급대출상품의 확대(자기상품 외 KfW 상품 취급),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분적 부담 면제, 낮은 거래비용, 은행자금과 KfW 자금의 동시 제공을 통한 수익성 제고

■ 지원내용

- 독일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보증(4,000억유로), 금융시장안정펀드(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Fund, FMS) 설정(1,000억유로) 등 총 5,000억달러 규모 금융시장안정대책('08년 10월)을 시행
 - 금융시장안정펀드는 금융기관 자본확충(800억유로), 보증채무 변제 준비금(200억유로) 등으로 이용됨.
-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경기부양책('08년 12월, 310억유로, 조세감면 제외)을 시행한 데 이어, 2009년 1월 유사한 내용의 2차 경기부양책(500억유로, 조세감면 제외)을 실시
 - 1차 경기부양책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독일재건은행을 통해 150억 유로 규모의 중소기업대출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상각을 2년 연장하는 조치가 포함됨.
 - 대출상한은 5천만 유로, 설비투자에 대해 1억 5천만 유로 한도이며, 운전자본에 대해 전년도 대차대조표의 30%까지 허용
 - 1차 경기부양책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대책,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 2차 경기부양책에서는 중소기업 R&D투자에 4.5억유로를 지원
 - 그 외에 2차 경기부양책에서는 도로, 학교시설, 초고속인터넷 기반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득세 감면 등도 포함시킴.

- 독일에서는 금융위기 발생후 중소기업의 긴급 구제금융을 목표로 독일경제자금(Wirtschaftsfond Deutschland, WD)을 마련하여 직접대출과 보증지원으로 운영
- WD는 총 150억 유로의 자금중 24.8억 유로의 자금이 보증은행에 공급되어 총 14,903개의 기업에 보증 제공

<표 3-17> 독일보증협회 산하 총보증기업수 및 총보증액

(단위: 개, 백만 유로)

연도	보증기업		총보증	
	기업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6년	6,950	1.4%	1,095.6	-0.9%
2007년	7,212	3.8%	1,151.9	5.1%
2008년	6,766	-6.2%	1,072.8	-6.9%
2009년	7,745	14.5%	1,261.3	17.6%
2010년	7,983	3.1%	1,301.0	3.1%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보증기업 수 및 총 보증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 신규 창업의 증가로 인하여 보증기업수 및 총보증액이 급격히 늘어났음.
- 2008년 동안 보증기업수와 보증금액이 각각 (-)6.2%, (-)6.9%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9년 보증기업 수와 보증금액은 각각 14.5%, 17.6%의 증가율을 보였음.
- 독일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KfW의 대출 실적이 2010년에는 크게 증가
- 경기 부양과 정책금융의 확대로 2010년 KfW의 대출실적은 814억 유로로 2009년의 대출실적에 비해 27.4% 증가하였음.

<표 3-18> 독일 KfW의 주요 기능 및 대출실적

(단위 : 10억 유로)

KfW 주요 부문	사업내용	대출실적		
		2009	2010	2011
1. KfW Mittelstandsbank	중소기업, 창업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자문 등 실시	23.9	28.6	22.4
2. KfW PrivatkundenBank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 교육 등에 대한 자금지원	16.1	20.0	16.7
3. KfW KommunalBank	지역 및 사회간접자본 개발 자금 지원	9.4	15.8	11.8
4. Capital market-related products and asset securitisation	자산유동화 지원 및 수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등	1.5	2.1	1.1
5. KfW IPEX Bank	수출 및 국제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국제화에 대한 자금지원	8.9	9.3	13.4
6. KfW Entwicklungsbank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	3.5	4.5	4.5
7. DEG	체제전환국 등 국제사회의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1.0	1.2	1.2
합 계		63.9	81.4	70.4

3) EU의 정책금융 지원 내용

- EU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EU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신용경

색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 EU의 정책금융 및 신용보증지원은 EIB와 EIF로 구성된 유럽투자은행이 담당
 - EIB(유럽투자은행)은 주로 중장기 용자를 수행하며, 소액용자는 전대방식의 대출방식을 거액용자는 직접용자 방식의 개별대출방식을 활용
 - EIF(유럽투자기금)은 주로 모험자본(Start-Up Facility), 종자펀드 및 인큐베이터 제공(Seed Capital Action), 지급보증(SME Guarantee Facility) 등 투자 및 보증업무를 수행
 - 창업 및 지급보증은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틀에서 소액대출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 단계의 기업에 대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소액대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분 보증을 해주고 있음.
 - 종업원 1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25,000 유로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직간접)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유럽 채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했으나 한편에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주장도 대두
 -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상충이 있어 중소기업지원은 개별회원국의 대출증가 및 신용보증지원으로 보완되고 있음.
- EIB그룹을 통해 대출 증가와 보증지원이 크게 증가
- '09년 유럽투자은행의 납입자본금을 34억 유로를 증가시키면서 이에 따라 '10년에는 560억 유로 정도의 대출증가가 있었음.
 - 유럽투자기금의 '11년 현재 총 자산규모는 12억 1,700만 유로로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해 지급보증과 벤처캐피탈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임.
 - '11년 유럽투자기금의 지원내역을 보면, 벤처캐피탈 11억 2,600만 유로, 지급보증 14억 6,140만 유로, 마이크로 파이낸싱 6,700만 유로임.

2. 시사점

- 각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금융지원 또는 신용보증지원은 경제 위기시 경기침체의 완충작용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 경기침체는 민간부문의 금융 기능이 약화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인 부문이 정부 정책 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자금지원과 대출 및 보증 규모를 확대

제4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과분석

제1절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

1.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에 관한 논의

-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금융은 직접대출, 특수목적 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
 - 직접 대출은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지자체가 직접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
 - 특수목적기관을 통한 자금제공은 소상공인에 간접대출 방식으로 자금지원
 - 이차보전은 정책당국이 대상자 자격 및 대출조건을 정하여 금융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차입자를 선정하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재정자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
 - 신용보증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민간 금융시장으로부터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융수단
-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은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개발하고 측정하여 정책자금의 기능들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책자금 효과분석방법으로 먼저 '거시적 분석'으로서 정책자금의 총량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존재
 -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간 생산/수요 의존관계에 의해 유발되는 정책자금 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생산/부가가치/노동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 부문을 식별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분석방법
 -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은 산업의 공급곡선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고 정책자금 지원이 외생적으로 변했을 경우에 국민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단기에 걸쳐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 비용편익(Benefit-Cost Ratio) 분석은 이는 정책자금 지원금액에 대비한 편익의 규모를 분석하는 것이며, 사업별 혹은 업력별 분석도 가능
 - 재정수입 기여도 분석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측면에서 기업들의 재정수입 기여 정도를 측정

- 이러한 거시적 분석 방법들은 정책자금 공급액에 비례하여 성과가 항상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금지원이 많을수록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편익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점을 가짐.
- ‘미시적 분석방법’은 기업의 재무제표 혹은 설문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재무적 혹은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존재
 - 이중차분추정법(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어느 정도 재무적 성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
 -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못한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차이가 현저히 존재할 경우 생존으로 인한 정책효과에 심각한 편익(bias)가 발생하는 것을 수정하여 추정하는 방식
 - 서베이(survey) 분석은 성과지표 중 DB화 되어 있지 않아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를 선별하여 설문조사로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
 - 이러한 미시적 측정지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재무적 성과로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연구개발투자비율 등이 활용되고, 비재무적 성과로는 고용증가, 노동생산성 개선 등이 사용
-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업 재무자료의 미비로 인해 거시적 분석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을, 미시적 분석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한 서베이 분석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분석
-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거시적 분석방법에 의존
 - 벡터자기회귀(VAR) 분석과 같은 거시집계 변수를 이용한 시계열분석(이종욱 2011; 임혜진·권의중·유승훈 2011),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한 비용-편익 분석(조덕희 외 2001; 신용보증기금 2008) 등
- 미시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로는 주로 보증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존재
 - 미시적 연구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효과를 측정(신용보증기금 2007, 2008, 최경규·강재원 2007), 또한 기술보증 효과분석(최경규·강재원 2007, 안종범·우석진 2010)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효과(김현욱 2005, 강종구·정형권 2006)
- 정책자금 성과측정에 관한 주요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김현욱(2005)은 '98년부터 '03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성과를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는데, 정책자금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영업이익률 성과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이 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중소기업에 지원되었으며, 정책자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초기기업에 비해 경쟁력 제고 등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강종구·정형권(2006)은 외환위기 이후 대출규모의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은 혁신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혁신 중소기업 중에도 업력이 짧을수록 수익성 개선효과가 큰 반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리인하를 통한 금융지원은 효과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지원 대상을 일반 중소기업에서 혁신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인하 대신 대출규모 확대를 통해 지원하고 업력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등을 두어야 함을 주장
 - 김준기 외(2006)의 연구는 김현욱(2005)의 연구의 추정결과에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즉 정책금융 수혜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금융 수혜기업과 정책금융 비수혜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교일수 있다고 하면서,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효과를 비교했을 경우 두 방식 모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총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주장
 - 중소기업연구원(2009)은 '02에서 '08년까지의 기간 중 기업특성과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자금 대출이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수익성의 경우 지원초기에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직접대출이 대리대출에 비해 수익성 효과가 더 컸으며, 안정성의 경우 지원초기에는 악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
 - 김세종 외(2011)는 창업기업과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이 집중되면서 업력 7년 전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을 지적
-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융의 성과는 측정방식, 측정시기, 측정대상, 측정지표, 활용자료 등에 따라 상이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효과 분석

1) 거시적 분석: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
 -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생산기술구조와 지역 간의 거래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산업별 거래내역을 나타낸 것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기법
 -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를 산업별로 세분하여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지출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
 -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 관계를 토대로 직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을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라고 정의
-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간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
 -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구조정책 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
- 산업연관분석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를 사용
 - 산업부문 총 산출액 = 이에 대응하는 총투입액
 - 세로방향: 각 산업의 비용구성, 즉 투입구조로, 이는 원재료 등의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이나 자본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 함.

- 가로방향: 각 산업의 생산물 판매, 즉 배분구조를 나타냄.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 판매되는 최종 수요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

■ 분석방법

○ 분석자료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발효과를 산출
- '12년 기준 정부/충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액을 각각 28개(통합대분류) 업종별로 구분하여 최종수요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

○ 투입계수

-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원료 등 중간 투입액과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를 해당 산업의 총투입액(=총산출액)으로 나눈 것
-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이며,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의 생산기술구조, 즉 투입과 산출의 생산함수를 의미

○ 유발효과

- 최종수요 발생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도 창출되기 때문에 최종수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종수요 발생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파악
- 최종수요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노동유발효과도 계측 가능
-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은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출액 즉,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산출액(취업인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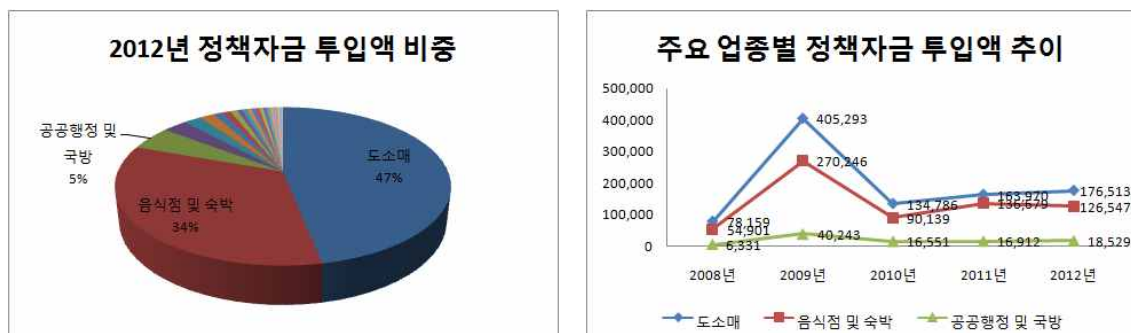
■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투입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표 4-1>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업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림수산물	224	1,390	415	825	731
광산품
음식료품	3,217	14,968	4,613	7,044	6,080
섬유 및 가죽제품	1,552	7,595	1,935	2,550	1,886
목재 및 종이제품	833	3,271	880	1,029	1,164
인쇄, 출판 및 복제	1,366	7,167	1,947	2,821	2,212
석유 및 석탄제품	.	.	50	.	20
화학제품	1,222	6,181	1,716	1,318	1,429
비금속광물제품	748	3,199	551	875	791
제1차금속제품	256	1,676	715	523	432
금속제품	2,204	9,101	2,549	2,545	3,042
일반기계	2,595	10,861	3,192	3,185	3,409
전기 및 전자기기	876	5,946	1,966	2,302	1,784
정밀기기	468	2,062	541	816	941
수송장비	1,016	4,535	1,297	1,441	1,57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588	12,894	3,387	4,303	4,297
전력, 가스 및 수도	73	428	115	173	60
건설	657	3,954	1,336	1,393	1,469
도소매	78,159	405,293	134,786	163,970	176,513
음식점 및 숙박	54,901	270,246	90,139	136,679	126,547
운수 및 보관	1,971	30,583	10,227	10,985	10,548
통신 및 방송	1,667	7,425	2,477	2,310	2,144
금융 및 보험	972	5,331	948	1,538	1,35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25	17,211	3,921	4,940	7,658
공공행정 및 국방	6,331	40,243	16,551	16,912	18,529
교육 및 보건	196	1,610	148	357	316
사회 및 기타서비스	695	4,061	1,794	1,345	1,701
기타	27,887	135,170	45,836	53,257	58,083
합계	193,595	1,012,396	334,028	425,435	434,713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DB



<그림 4-1>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비중과 추이

- 전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8,5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674억 원, 취업유발인원 15,483명으로 추정

<표 4-2> 지역경제 파급효과(전국, '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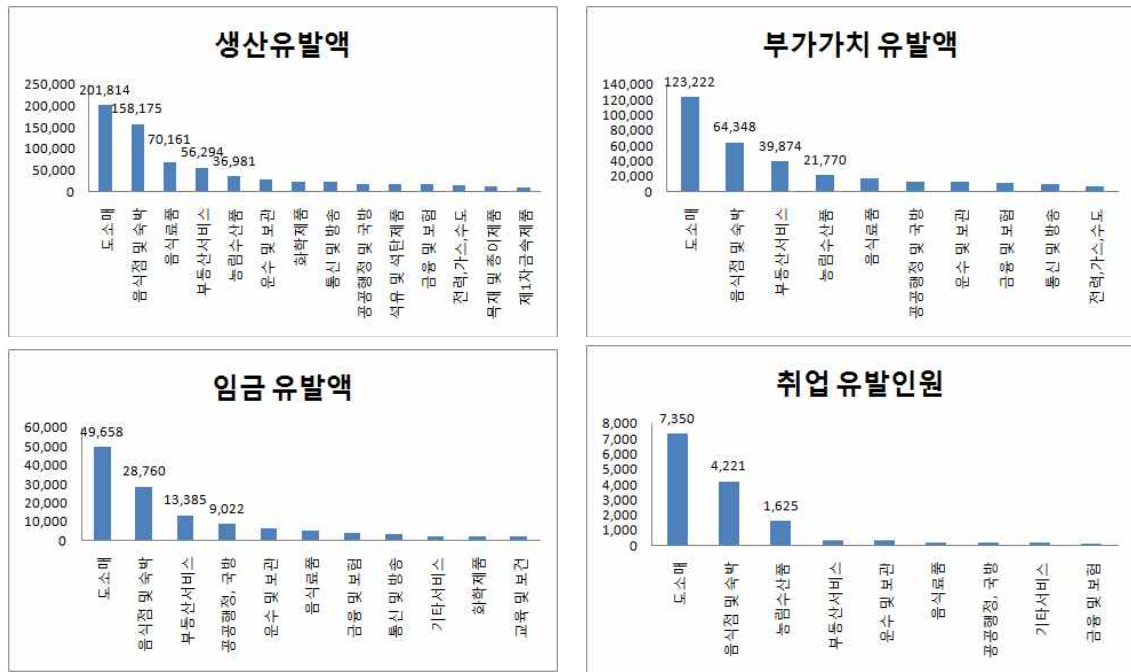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명)

지역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임금유발액	수입유발액	취업유발인원
전국	850,026	367,415	145,491	67,298	15,483

<표 4-3>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전국, '12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산업 코드	부문명칭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임금 유발액	수입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001	농림수산물	36,981	21,770	1,998	812	1,625
002	광산물	457	265	103	3	2
003	음식료품	70,161	17,378	5,269	7,607	250
004	섬유 및 가죽제품	8,701	2,469	1,390	1,389	68
005	목재 및 종이제품	12,334	3,519	1,651	2,515	60
006	인쇄, 출판 및 제	5,884	2,606	1,368	253	59
007	석유 및 석탄제품	18,947	5,805	349	11,531	3
008	화학제품	24,851	5,840	2,482	5,358	67
009	비금속광물제품	3,684	1,311	525	506	14
010	제1차금속제품	10,818	2,055	624	2,242	11
011	금속제품	9,579	2,872	1,711	546	56
012	일반기계	7,530	2,063	1,105	711	34
013	전기 및 전자기기	8,985	2,328	983	2,501	29
014	정밀기기	1,861	527	295	282	12
015	수송장비	7,170	1,533	897	806	20
0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8,234	2,236	1,218	836	48
017	전력, 가스 및 수도	16,989	6,919	1,511	4,734	26
018	건설	4,239	1,903	1,164	148	44
019	도소매	201,814	123,222	49,658	3,666	7,350
020	음식점 및 숙박	158,175	64,348	28,760	7,652	4,221
021	운수 및 보관	28,255	13,067	6,945	4,266	394
022	통신 및 방송	22,719	11,020	3,723	1,010	90
023	금융 및 보험	18,211	11,474	4,394	363	121
0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6,294	39,874	13,385	887	405
025	공공행정 및 국방	19,685	13,248	9,022	1,974	207
026	교육 및 보건	4,218	2,994	2,409	87	68
0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9,512	4,771	2,553	144	198
028	기타	73,738	0	0	4,470	0
합계		850,026	367,415	145,491	67,298	15,483



<그림 4-2> 전국 소상공인 정책자금 투입에 따른 업종별 직접파급효과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도소매업이 약 2,0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1,582억, 음식료품업이 약 701억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생산유발액은 8,500억 원으로 추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 역시 도소매업이 약 1,23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643억, 그리고 부동산서비스업이 399억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3,674억 원으로 추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임금 유발액은 도소매업이 약 49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288억, 그리고 부동산서비스업이 134억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1,455억 원으로 추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도소매업에서 약 7,35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4,221명, 그리고 농림수산업이 1,625명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15,483명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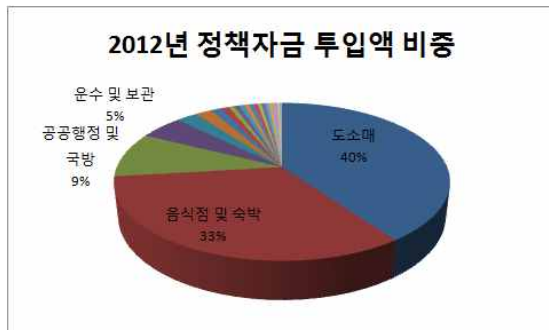
■ 충남 소상공인 정책자금 투입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표 4-4> 충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업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림수산물	71	305	160	200	345
광산품
음식료품	728	2,667	627	1,420	1,265
섬유 및 가죽제품	60	528	75	296	327
목재 및 종이제품	76	540	110	175	401
인쇄, 출판 및 복제	228	867	179	261	286
석유 및 석탄제품	.	.	30	.	.
화학제품	82	738	251	165	245
비금속광물제품	85	676	90	149	154
제1차금속제품	20	111	110	60	30
금속제품	226	708	65	336	353
일반기계	142	1,159	276	311	612
전기 및 전자기기	310	1,006	473	437	396
정밀기기	26	85	79	76	268
수송장비	131	484	275	154	233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387	1,438	428	942	796
전력, 가스 및 수도	20	35	45	.	26
건설	168	710	577	373	417
도소매	10,891	45,769	27,801	25,095	26,477
음식점 및 숙박	6,838	33,628	19,132	23,095	21,759
운수 및 보관	463	6,661	4,275	3,023	3,282
통신 및 방송	142	695	266	251	274
금융 및 보험	212	558	170	115	12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6	1,817	1,253	1,014	1,597
공공행정 및 국방	1,278	8,019	6,044	4,668	6,115
교육 및 보건	.	185	25	15	.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5	585	434	133	211
기타	3,738	15,805	9,249	8,249	8,176
합계	26,516	125,775	72,497	71,008	74,164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DB



<그림 4-3> 충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액 비중과 추이

- 충남지역 업종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977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34억 원, 취업유발인원 2,047명으로 추정

<표 4-5> 지역경제 파급효과(충남, '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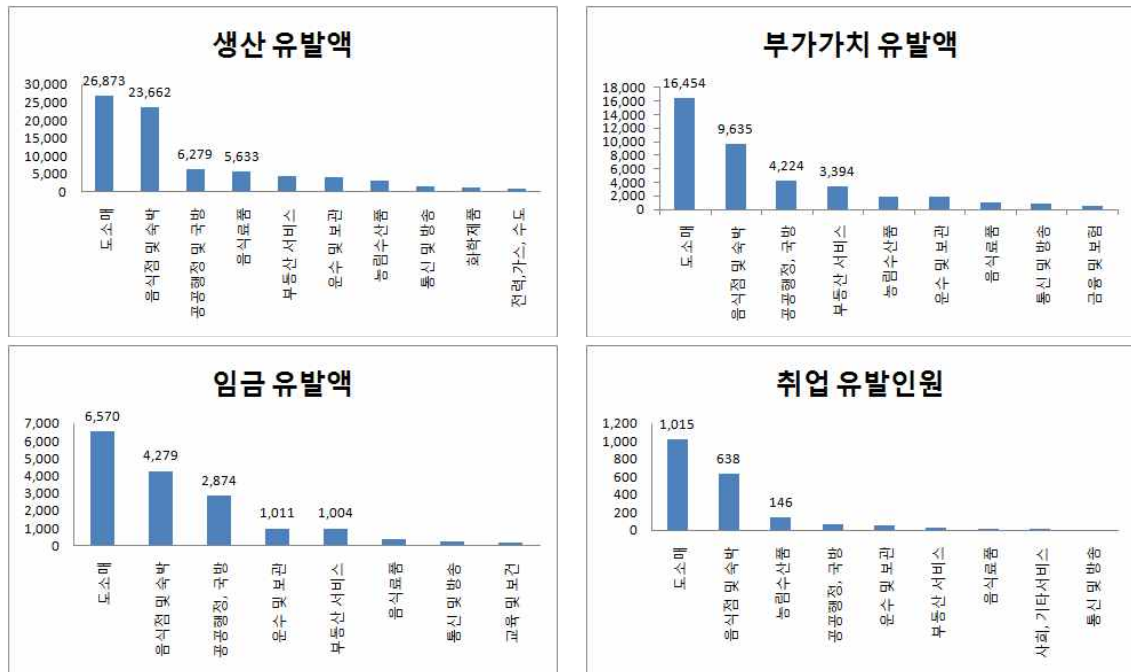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명)

지역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임금유발액	수입유발액	취업유발인원
충남	97,733	43,447	18,330	6,177	2,047

<표 4-6>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충남, '12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산업 코드	부문명칭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임금 유발액	수입 유발액	취업 유발인원
001	농림수산물	3,240	1,933	137	60	146
002	광산물	18	10	3	0	0
003	음식료품	5,633	1,029	416	570	18
004	섬유 및 가죽제품	506	127	72	90	3
005	목재 및 종이제품	814	249	96	205	3
006	인쇄, 출판 및 제	414	192	102	17	4
007	석유 및 석탄제품	804	271	15	458	0
008	화학제품	1,184	242	90	325	2
009	비금속광물제품	379	148	54	61	1
010	제1차금속제품	172	27	9	37	0
011	금속제품	582	163	103	37	3
012	일반기계	741	201	98	73	3
013	전기 및 전자기기	667	180	75	165	2
014	정밀기기	293	82	45	42	2
015	수송장비	487	98	50	46	1
0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965	241	120	98	4
017	전력,가스 및 수도	1,082	394	91	315	2
018	건설	536	240	147	19	6
019	도소매	26,873	16,454	6,570	452	1,015
020	음식점 및 숙박	23,662	9,635	4,279	1,142	638
021	운수 및 보관	4,049	1,921	1,011	565	61
022	통신 및 방송	1,753	842	254	70	8
023	금융 및 보험	835	519	198	17	6
0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569	3,394	1,004	54	29
025	공공행정 및 국방	6,279	4,224	2,874	632	66
026	교육 및 보건	375	272	219	8	6
0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702	362	196	10	18
028	기타	10,118	0	0	606	0
합계		97,733	43,447	18,330	6,177.1	2,047



<그림 4-4> 충남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투입에 따른 업종별 직접파급효과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도소매업이 약 26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237억,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가 약 63억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생산유발액은 977억 원으로 추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 역시 도소매업이 약 16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96억,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가 42억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434억 원으로 추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임금 유발액은 도소매업이 약 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43억,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가 29억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183억 원으로 추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도소매업에서 약 1,0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약 638명, 그리고 농림수산업이 146명 수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2,047명으로 추정

2) 미시적(비재무적) 분석: 설문조사 분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12년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높은 금리와 각종 부대비용(49%), 보증서 및 보증서 요구(27%) 등을 지적
 - 매출액이 낮은 업체일수록 높은 금리와 부대비용을, 매출액 규모가 높은 업체일수록 보증서 및 보증인, 추가담보의 요구를 지적
- 정책자금을 수혜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자금조달 대안으로는 친인척자금(48%)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자금확보를 포기한다는 응답(22%)이 다음으로 많았음.



<그림 4-5> 자금조달의 애로사항 및 대안

- 자금조달의 목적은 사업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응답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담보 및 신용대출의 목적은 사업자금마련(48.4%), 거주주택마련(23.4%),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18.4%)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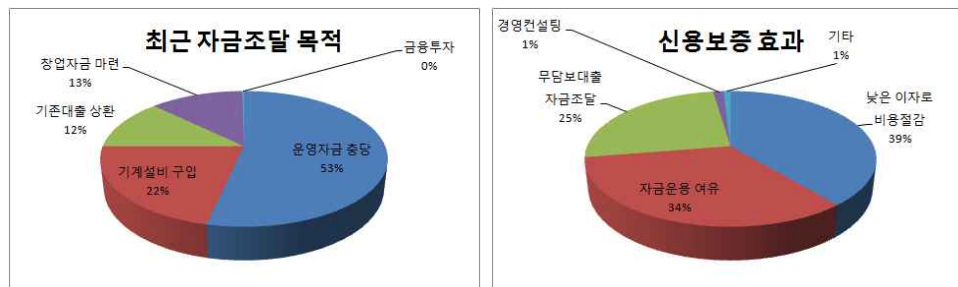
<표 4-7> 매출액 규모별 자금조달 목적

구분	운영자금 충당	기계설비 구입	기존대출 상환	창업자금 마련	금융투자
300만 이하	20	11	10	6	0
500만 이하	24	6	7	7	0
1000만 이하	42	22	6	8	1
3000만 이하	46	17	12	13	0
5000만 이하	24	9	5	9	0
5000만 초과	43	17	7	3	0

- 신용보증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답변
 -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응답과 변동 없다는 응답이 비슷
 - 신용보증제도로 고용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약 20%의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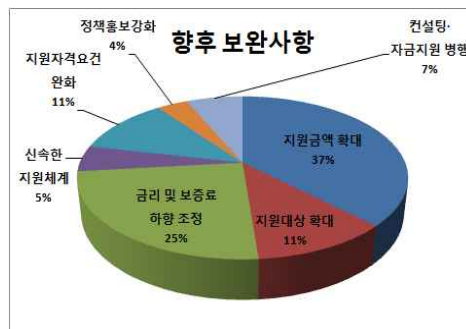
답자는 약 1~2명의 고용증대가 있었다고 선택

- 약 80%의 응답자가 신용보증지원 수혜 후 추가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택하여 신용보증제도가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신용보증 정책지원 효과

- 향후 정책금융지원 혹은 신용보증제도의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으로 지원금액 확대 (37%)를 요청하였으며, 금리 인하 및 보증료 하향 조정(25%)도 필요하다고 응답



<그림 4-7> 향후 보완사항

3) 미시적(재무적) 분석: 매출액 분석

■ 매출액 분석 개요

- 본 매출액 분석은 '08년부터 '11년까지 16개 지자체의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보증신청한 경험이 있는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액 자료를 분석
 - 보증신청시 매출액 자료와 1년 후 보증연장 신청시 매출액 자료를 비교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 1년 후의 증감액(율)을 산출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정책자금 신청규모가 가장 크고, 매출액 증가는 도소매업과 기타 업종에서 가장 높음.
 - 정책자금 수혜 후 종업원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음.
- 업력별로는 창업후 1~3년 사이의 업력이 짧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김현욱(2005), 강종구·정형권(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

<표 4-8>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국)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3,636	4,502	72,072	9,209,200	60	8.95	4.96	210	0	0.01
서비스업	3,317	2,573	14,868	2,000,000	100	4.76	1.89	173	0	0.01
음식숙박	4,590	2,570	18,151	11,017,300	30	6.51	1.57	40	0	0.01
도소매업	9,917	3,302	51,666	5,197,100	20	24.93	1.44	47	0	0.01
기타	4,338	3,287	43,852	1,594,500	20	35.07	2.56	240	0	0.01
전체	25,798	3,245	42,534	11,017,300	20	18.51	2.20	240	0	0.01

<표 4-9>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국)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710	2,576	21,938	300,000	100	0.48	1.02	9	0	0.03
1~2년	3,475	2,466	22,347	935,400	96	32.50	1.37	49	0	0.01
2~3년	3,453	2,862	33,024	2,511,300	20	26.94	1.80	100	0	0.00
3~4년	2,534	3,042	41,433	11,017,300	100	2.95	1.83	95	0	0.01
4~5년	2,068	3,234	41,632	5,197,100	60	3.08	2.06	77	0	0.02
5년 이상	13,558	3,616	51,551	9,209,200	20	18.99	2.67	240	0	0.01

■ 충남지역 매출액 분석

<표 4-10>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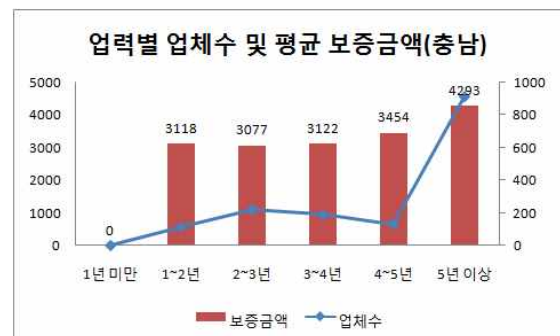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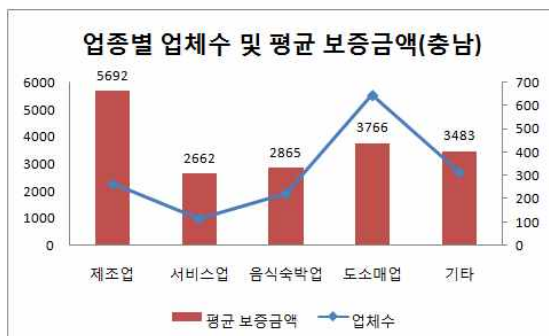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264	5,692	129,136	1,319,900	800	13.2	6.46	74	0	0
서비스업	114	2,662	18,735	197,300	300	18.74	2.32	45	0	0
음식숙박업	223	2,865	20,854	385,900	600	8.15	2.03	33	0	-0.01
도소매업	645	3,766	63,119	1,196,300	100	144.37	1.71	25	0	0
기타	315	3,483	59,014	1,152,000	500	410.97	3.4	140	0	0
전체	1561	3,825	64,176	1,319,900	100	147.35	2.94	140	0	0

<표 4-11>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남)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0	-	-	-	-	-	-	-	-	-
1~2년	112	3,118	37,910	441,100	200	73.66	2.26	30	0	0
2~3년	221	3,077	44,567	970,100	500	26.16	2.21	47	0	-0.01
3~4년	188	3,122	42,836	1,196,300	600	1.23	2.01	16	0	0
4~5년	130	3,454	55,844	1,007,000	1100	5.99	2.83	74	0	0
5년 이상	910	4,293	77,770	1,319,900	100	236.23	3.42	140	0	0



<그림 4-8> 충남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 타지역 매출액 분석

<표 4-12>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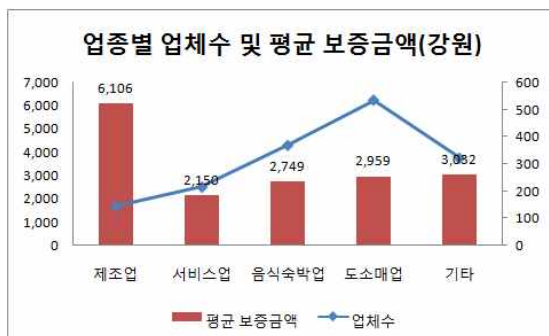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145	6,106	121,228	204,470	200	66.0%	9.51	77	0	-0.01명
서비스업	216	2,150	10,985	691,600	200	30.3%	1.32	80	0	0.0명
음식숙박업	369	2,749	9,262	54,100	200	49.5%	0.47	9	0	0.0명
도소매업	535	2,959	41,914	838,600	100	105.1%	0.90	42	0	0.0명
기타	322	3,032	33,259	1,290,600	100	34.6%	1.57	58	0	0.01명
전체	1,587	3,008	35,992	204,470	100	64.0%	1.8	80	0	0.0명

<표 4-13>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강원)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1	3,000	8,500	8,500	8500	-78.8%	3	3	3	0.0명
1~2년	159	2,119	7,471	148,800	100	431.8%	0.37	16	0	0.0명
2~3년	186	2,349	23,641	838,600	200	81.16	0.59	20	0	0.0명
3~4년	164	2,364	20,357	389,000	200	15.82	0.62	15	0	0.0명
4~5년	124	2,735	30,092	501,600	500	26.39	1.77	77	0	0.0명
5년 이상	953	3,431	46,648	204,470	100	12.59	2.47	80	0	0.0명



<그림 4-9> 강원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14>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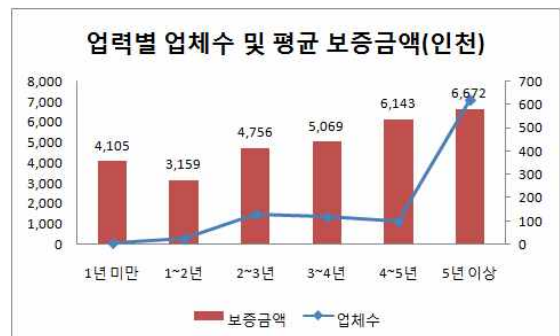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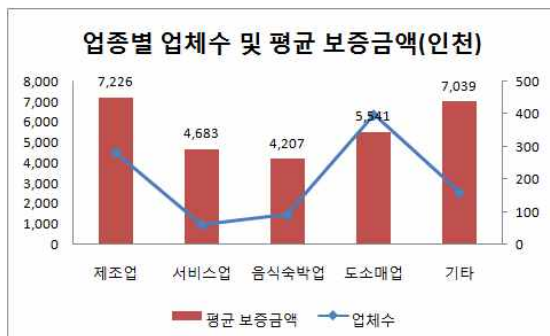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282	7,226	108,453	942,200	3,800	0.47	6.35	57	0	0.01
서비스업	60	4,683	43,813	387,400	1,500	0	3.6	70	0	0
음식숙박업	91	4,207	33,166	171,400	100	1.74	2.74	40	0	-0.01
도소매업	398	5,541	105,494	3,438,000	2,100	-0.01	1.73	38	0	-0.01
기타	159	7,039	112,275	1,594,500	2,900	-0.02	4.18	90	0	0
전체	990	6,087	97,039	3,438,000	100	0.29	3.65	90	0	0

<표 4-15>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인천)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5	4,105	44,880	128,800	5,300	0	0.6	3	0	0
1~2년	24	3,159	34,717	248,600	2,900	0	4.08	49	0	0
2~3년	127	4,756	78,098	2,511,300	4,200	0	2.55	40	0	0
3~4년	117	5,069	95,380	1,147,700	2,300	0.29	2.35	38	0	-0.01
4~5년	97	6,143	81,361	447,900	7,200	1.42	2.76	19	0	0.02
5년 이상	620	6,672	106,518	3,438,000	100	0.18	4.26	90	0	0



<그림 4-10> 인천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16>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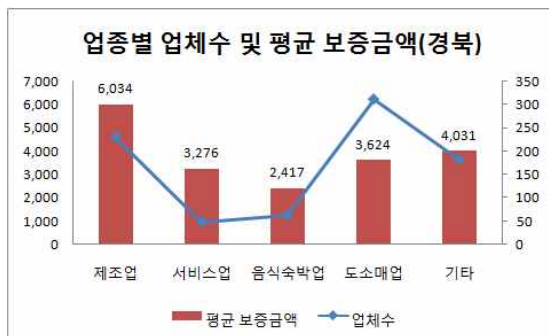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230	6,034	108,183	1,606,200	500	57.35	7.93	75	0	-0.01
서비스업	48	3,276	28,005	419,700	200	47.96	3.63	48	0	0.1
음식숙박업	62	2,417	15,311	83,400	500	20.62	2.08	9	0	0.02
도소매업	311	3,624	76,556	678,600	500	53.72	2.09	20	0	0.03
기타	181	4,031	57,803	869,900	200	25.67	3.94	60	0	0.07
전체	832	4,269	73,855	1,606,200	200	45.83	4.19	75	0	0.03

<표 4-17>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북)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1	1,300	15,400	15,400	15,400	-98.1	2	2	2	0
1~2년	35	3,176	19,771	181,900	200	223.2	3.17	25	0	0.03
2~3년	86	3,860	47,862	509,900	1,000	161.8	3.58	35	0	0
3~4년	70	4,302	67,141	369,600	700	34.7	3.01	12	0	0.09
4~5년	78	4,003	67,267	334,300	1,600	20.9	3.58	20	0	0.05
5년 이상	562	4,438	83,055	1,606,200	200	22.2	4.59	75	0	0.03



<그림 4-11> 경북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18>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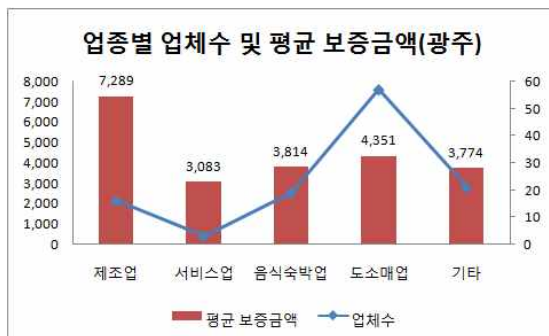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16	7,289	827,913	9,209,200	9,000	-0.62	21.38	210	0	0
서비스업	3	3,083	7,533	14,800	3,300	0	0.33	1	0	0
음식숙박업	19	3,814	25,547	68,200	3,000	-0.26	1.05	4	0	0.21
도소매업	57	4,351	102,758	1,572,900	3,400	5.35	1.63	9	0	0.04
기타	21	3,774	79,457	612,000	900	1.24	2.24	17	0	0
전체	116	4,531	183,452	9,209,200	900	2.73	4.34	210	0	0.05

<표 4-19>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광주)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0	-	-	-	-	-	-	-	-	-
1~2년	11	3,768	85,955	612,000	4,800	0	1.36	5	0	0
2~3년	17	3,497	65,476	307,500	900	7.25	1.35	5	0	0.12
3~4년	12	4,000	42,767	207,800	4,000	-3.76	2.17	10	0	0
4~5년	11	5,068	66,545	210,000	3,000	-1.16	2.36	16	0	0.36
5년 이상	65	4,938	276,563	9,209,200	3,300	3.86	6.35	210	0	0



<그림 4-12> 광주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20>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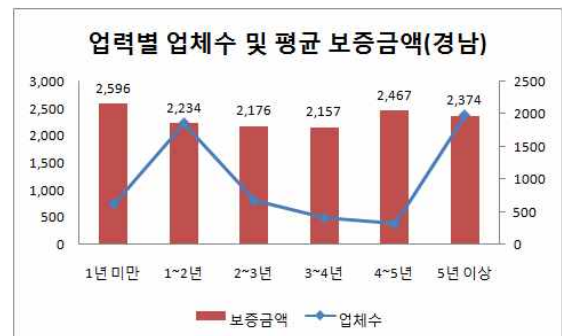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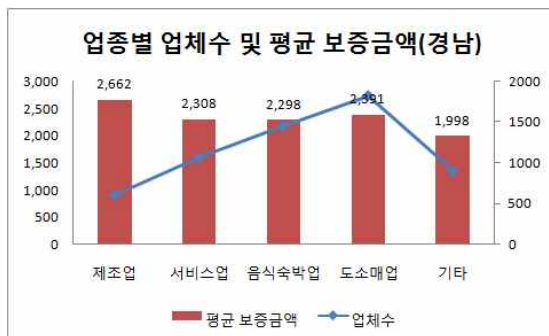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606	2,662	42,019	504,900	1,000	1.59	2.63	100	0	-0.01
서비스업	1,068	2,308	16,514	304,900	1,200	1.04	1.21	77	0	0.01
음식숙박업	1,454	2,298	21,025	120,000	2,000	0.57	1.3	4	0	0.01
도소매업	1,826	2,391	38,487	840,000	200	2.51	0.86	44	0	0
기타	901	1,998	22,905	799,400	1,400	0.8	1	128	0	0.01
전체	5,855	2,320	28,110	840,000	200	1.4	1.24	128	0	0.01

<표 4-21>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경남)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625	2,596	22,192	300,000	200	1.07	0.98	5	0	0.02
1~2년	1,858	2,234	26,611	840,000	1,200	2.46	1.13	30	0	0
2~3년	668	2,176	26,908	441,300	2,000	1.42	1.34	100	0	0.01
3~4년	407	2,157	25,397	400,000	2,400	0.02	1	9	0	-0.01
4~5년	318	2,467	31,034	299,200	2,000	0.22	1.3	13	0	0.02
5년 이상	1,979	2,374	31,881	799,400	1,000	0.98	1.42	128	0	0



<그림 4-13> 경남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22>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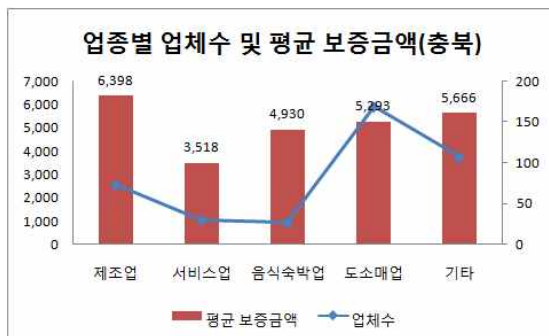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73	6,398	159,229	1,384,400	1,800	0.31	11.71	130	0	0
서비스업	30	3,518	26,910	107,400	800	-2.16	6.3	95	0	0.13
음식숙박업	27	4,930	38,504	159,100	3,900	0	2.63	9	0	0
도소매업	169	5,293	112,997	1,968,800	1,200	0.07	2.01	11	0	0
기타	107	5,666	101,541	1,415,200	4,800	13.88	8.01	122	0	0
전체	396	5,429	107,113	1,968,800	800	3.33	5.63	130	0	0.01

<표 4-23>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충북)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1	1,200	16,000	16,000	16,000	0	2	2	2	0
1~2년	22	4,527	70,777	357,700	1,200	-4.37	3.45	9	0	0
2~3년	50	4,260	77,008	428,100	800	11.99	3.68	41	0	0.08
3~4년	55	5,533	136,165	1,968,800	7,300	-0.03	6.36	95	0	0
4~5년	36	5,045	86,350	433,000	900	0.63	5.36	48	0	0
5년 이상	232	5,819	113,773	1,415,200	1,500	3.42	6.15	130	0	0



<그림 4-14> 충북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24>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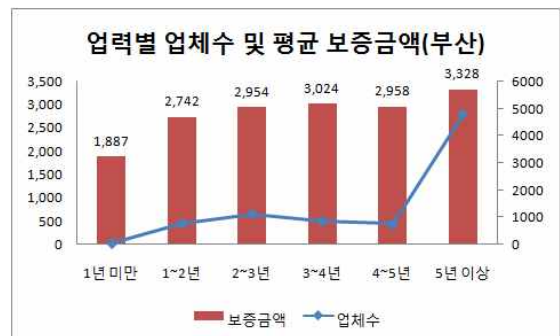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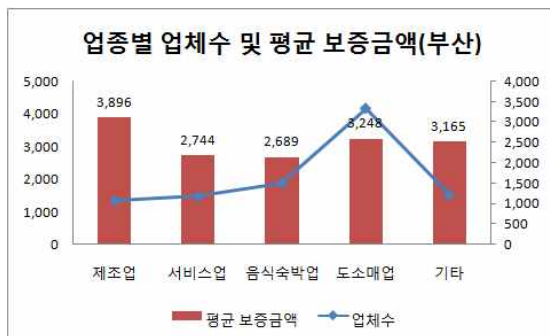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1,078	3,896	43,411	820,400	60	-0.03	3.74	55	0	0.03
서비스업	1,183	2,744	9,787	323,800	100	1.36	2.18	173	0	0.03
음식숙박업	1,509	2,689	10,273	239,400	30	1.01	1.74	15	0	0.03
도소매업	3,342	3,248	44,397	1,947,500	20	14.96	1.53	47	0	0.02
기타	1,228	3,165	39,022	1,348,200	20	1.05	2.44	184	0	0.02
전체	8,340	3,147	32,398	1,947,500	20	6.52	2.08	184	0	0.03

<표 4-25>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부산)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42	1,887	10,339	84,100	100	0.33	1.14	4	0	0.24
1~2년	780	2,742	11,843	935,400	96	4.05	1.64	20	0	0.01
2~3년	1,123	2,954	30,394	1,947,500	20	36.98	1.82	24	0	-0.01
3~4년	856	3,024	29,863	1,414,200	100	0.59	1.73	25	0	0.01
4~5년	745	2,958	28,955	623,700	60	-0.13	1.82	33	0	0.04
5년 이상	4,796	3,328	37,537	1,803,500	20	1.18	2.33	184	0	0.04



<그림 4-15> 부산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26>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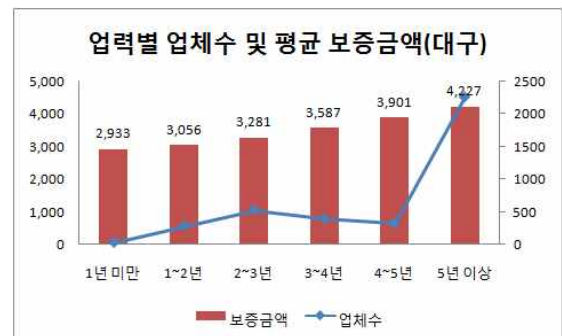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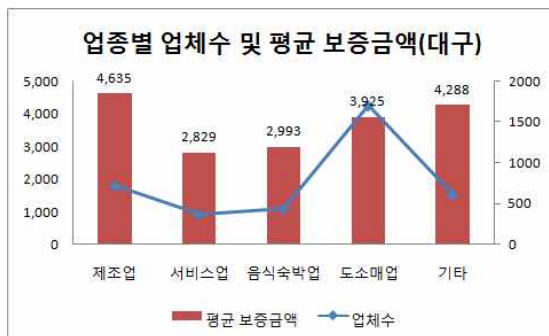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714	4,635	61,316	1,850,000	100	4.63	4.94	50	0	0.02
서비스업	364	2,829	18,731	2,000,000	100	2.66	2.35	40	0	-0.03
음식숙박업	435	2,993	15,090	179,000	100	0.56	2	26	0	0
도소매업	1,701	3,925	60,077	5,197,100	100	8.3	1.74	26	0	0
기타	607	4,288	51,015	872,400	100	3.38	3.29	52	0	0
전체	3,821	3,905	49,809	5,197,100	100	5.42	2.67	52	0	0

<표 4-27>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구)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31	2,933	31,226	293,400	200	-5.25	1.39	9	0	-0.06
1~2년	285	3,056	25,650	765,200	100	27.31	1.82	30	0	0.04
2~3년	527	3,281	32,218	502,500	100	11.22	2.09	26	0	-0.02
3~4년	393	3,587	37,670	535,200	200	3.31	2.45	35	0	0
4~5년	328	3,901	61,733	5,197,100	100	0.89	2.39	44	0	-0.01
5년 이상	2,257	4,227	57,602	2,000,000	100	2.47	3.02	52	0	0



<그림 4-16> 대구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28>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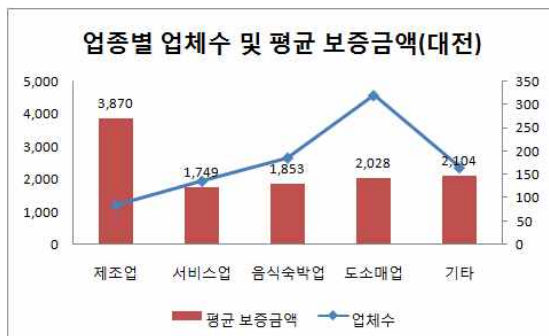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84	3,870	38,774	531,800	700	-1.08	3.95	25	0	0
서비스업	136	1,749	11,415	209,700	500	3.9	1.68	20	0	-0.01
음식숙박업	186	1,853	12,797	101,700	100	0.69	1.42	9	0	0
도소매업	320	2,028	23,734	330,300	500	0.63	0.98	31	0	0
기타	165	2,104	33,225	1,481,700	800	1.11	3.01	240	0	0.01
전체	891	2,137	22,746	1,481,700	100	1.07	1.84	240	0	0

<표 4-29>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대전)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1	2,457	6,000	6,000	6,000	0	4	4	4	0
1~2년	100	1,618	6,547	49,900	100	4.4	0.99	4	0	-0.01
2~3년	145	1,701	12,409	68,400	600	1.31	0.98	5	0	0
3~4년	118	2,019	25,013	330,300	600	0.06	1.34	9	0	0
4~5년	57	1,852	16,123	89,000	1,200	0	1.04	4	0	0
5년 이상	470	2,444	29,651	1,481,700	900	0.67	2.5	240	0	0



<그림 4-17> 대전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30>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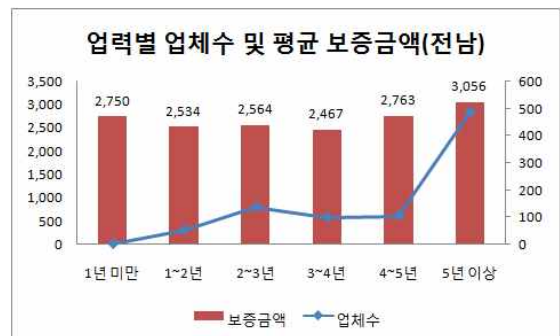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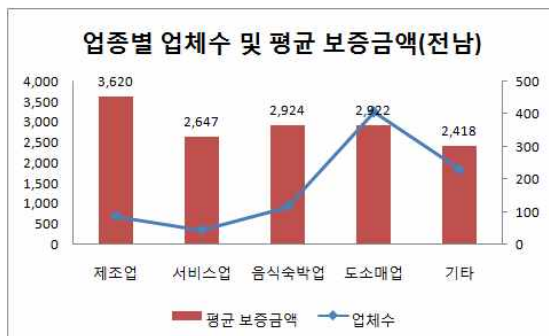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87	3,620	71,440	427,700	300	0.78	5.16	37	0	0
서비스업	45	2,647	19,784	313,800	2,000	0	2.64	8	0	0
음식숙박업	117	2,924	18,924	95,800	1,000	5.19	2.26	9	0	0
도소매업	407	2,922	52,080	2,507,300	600	1.19	1.62	9	0	-0.01
기타	230	2,418	36,413	412,800	500	2.48	2.23	23	0	0
전체	886	2,846	43,895	2,507,300	300	1.95	2.26	37	0	-0.01

<표 4-31>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남)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3	2,750	11,100	15,500	7,200	0	1	1	1	0
1~2년	54	2,534	21,231	230,600	600	14.2	1.93	8	0	0
2~3년	137	2,564	35,760	427,700	1,800	0.04	2.32	35	0	0
3~4년	99	2,467	35,441	251,800	300	0.65	2.01	9	0	0
4~5년	106	2,763	30,619	200,600	500	3.2	2.19	9	0	-0.05
5년 이상	487	3,056	53,507	2,507,300	500	1.14	2.36	37	0	0



<그림 4-18> 전남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32>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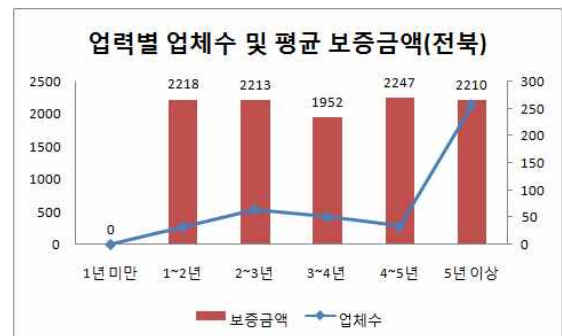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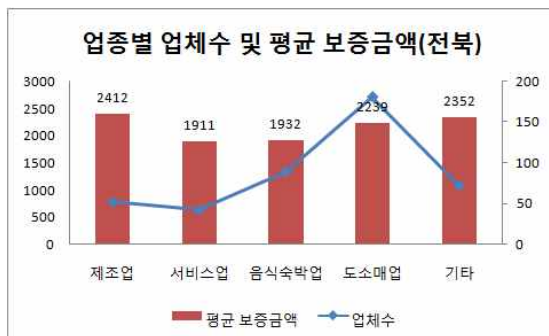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52	2,412	59,527	1,089,500	600	37.52	2.88	11	0	0.02
서비스업	42	1,911	34,105	1,126,200	500	20.42	1.07	8	0	-0.05
음식숙박업	89	1,932	13,356	69,100	100	56.44	1.81	4	0	0
도소매업	181	2,239	41,614	429,100	600	62.9	1.08	4	0	-0.01
기타	72	2,352	44,822	1,210,600	300	8.9	1.67	18	0	-0.01
전체	436	2,184	37,789	1,210,600	100	45.55	1.54	18	0	-0.01

<표 4-33>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전북)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0	-	-	-	-	-	-	-	-	-
1~2년	32	2,218	9,341	106,300	100	362.44	1.25	4	0	0
2~3년	64	2,213	30,105	424,100	300	81.88	1.69	6	0	0.02
3~4년	50	1,952	25,726	217,100	1,000	6.89	1.08	3	0	0.06
4~5년	33	2,247	60,139	1,089,500	900	-0.58	1.85	4	0	-0.09
5년 이상	257	2,210	42,721	1,210,600	500	10.49	1.59	18	0	-0.02



<그림 4-19> 전북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표 4-34> 업종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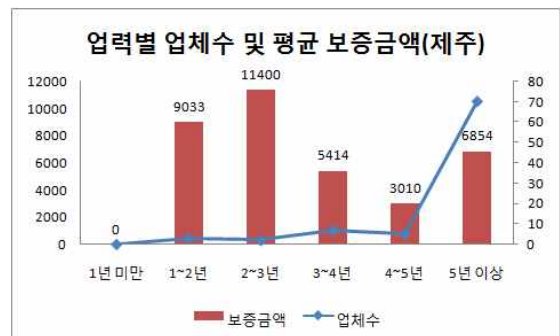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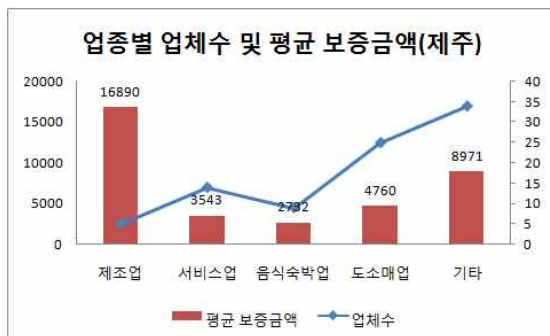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제조업	5	16,890	287,880	771,300	3,400	0	8.8	18	3	0
서비스업	14	3,543	11,721	30,900	1,000	-1.09	3.14	9	0	0
음식숙박업	9	2,732	12,311	31,700	900	0	2.78	7	0	0
도소매업	25	4,760	52,592	314,400	400	9.36	2.44	15	0	-0.08
기타	34	8,971	118,265	1,102,000	1,800	0.42	7.59	81	0	0
전체	87	6,697	81,036	1,102,000	400	2.68	4.97	81	0	-0.02

<표 4-35> 업력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증감 통계 (제주)

(단위: 만원, 명, %)

구분	N	평균 보증금액	매출액(만원)				종업원수(명)			
			평균	Max	Min	평균 증감율	평균	Max	Min	평균 증감
1년 미만	0	-	-	-	-	-	-	-	-	-
1~2년	3	9,033	34,367	94,900	1,800	0	4.33	9	0	0
2~3년	2	11,400	17,950	35,500	400	0	1.5	2	1	0
3~4년	7	5,414	51,571	196,900	5,700	0	4	5	2	0
4~5년	5	3,010	57,400	116,900	2,300	-8.58	1.6	3	0	0
5년 이상	70	6,854	89,473	1,102,000	900	3.94	5.43	81	0	-0.03



<그림 4-20> 제주지역의 정책자금 지원 업체수 및 평균보증금액

제2절 정책자금 지원규모 적정성 평가

1. 정책자금 적정규모 산정방식에 관한 논의

- 우리나라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 적정 지원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자금 효율성 및 성과의 극대화, 재정부담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하지만 계량적 분석을 통한 정책자금 적정규모 산출은 쉽지 않은데,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자료의 부족, 정책 환경에 따른 관련 시계열 자료의 불안정성, 그리고 경제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특성에 기인
- 하나의 사례로 정부가 공적 보증규모의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GDP 대비 보증 규모의 국가간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보면,
 - 과거 IMF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GDP 대비 보증규모 비율이 '97년 3.5%에서 '01년 6.2%까지 급격히 증가하자 IMF는 민간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의 규모를 GDP 대비 1%대까지 낮출 것을 권고한 경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 수준의 비교는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없고,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금융인프라수준, 경제성장 경로의 이질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짐.
- 또 다른 방식으로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부족분(Funding Gap; FG)을 산출한 후 이의 변화추이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음.
 - 자금부족분 측정을 위해서는 자금의 유효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교한 추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높지 않은 한계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이나 충분성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거의 없고, 단지 정부/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
 - 국제/국내 경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00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단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조절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인해 '09년 우리나라 정책금융 규모가 단기적으로 급증하였다가 금융위기의 진정국면 도래에 따라 지원규모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시 복귀
- 결국 선행연구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거

에 관한 연구들이거나 정책금융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며, 이와 더불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설문조사에 의한 미시적 분석에 그치고 있는 상황
- 강종구·정형권(2006)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수익성과 성장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는 미미하여, 업력이 짧은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금리우대보다는 대출규모 확대가 중소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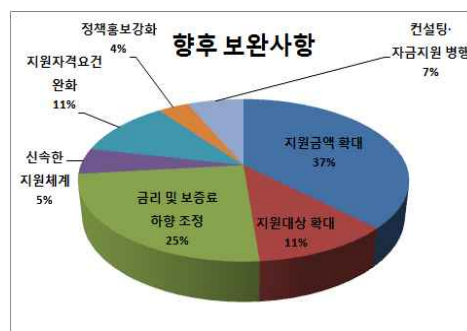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평가

1) 설문조사 결과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12년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향후 정책금융 지원 혹은 신용보증제도의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지원금액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하향 조정(25%)이 필요하다고 응답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응답자도 상당수로, 자금지원 규모가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

<표 4-36> 업종별 향후 보완사항

구분	지원금액 확대	지원대상 확대	금리 및 보증료 하향 조정	신속한 지원체계	지원자격 요건 완화	정책홍보 강화	컨설팅·자금지원 병행
도소매업	99	26	64	13	26	7	21
서비스업	44	15	33	7	16	4	4
제조업	39	12	24	8	11	5	5
음식숙박	42	17	30	4	14	7	8
기타	36	9	20	4	12	2	8
합계	260	79	171	36	79	25	46



<그림 4-21> 향후 보완사항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와의 비교 분석

-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서 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취지와 기능은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유사하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와 비교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정규모를 살펴 볼 수 있음.
 -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정규모를 계량적으로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한 후, 매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되었는가를 조사

<표 4-37> '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및 주요내용

(단위: 억원)

구분	예산		융자조건		
	'12년	'13년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창업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	12,300 (200) (1,300)	12,500 (400) (1,3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기준금리 $\Delta 0.30\%p$ 업력 5년 미만, 예비창업자
개발기술사업화	2,580	3,00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기준금리 $\Delta 0.30\%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8,850	6,3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업력 5년 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2,500 (1,000) (400) (300) (800)	950 (-) (250) (700)	연간 10억원	5년 이내 (수출 18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p$ * 재해기업: 3%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1,650	1,7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업종전환 4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기준금리 $\Delta 0.30\%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소상공인지원 (소공인특화)	4,250 (450)	7,500 (2,500)	7천만원 (나들가게 1억원) (소공인특화 2억원)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1,500 (1,100) (400)	1,500 (1,100) (400)	연간 30억원 (운전 10억원)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	5,000	5억원 이내	3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p 이차보전: 혁신형, 일자리창출기업(3%p) 그 외 기업(2%p)
합계	33,330	38,500			

주1) '12년 예산은 당초금액 기준('12.7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900억원 증액)

주2) 융자기간 및 금리 등은 대출 유형 및 기업 평가등급 등에 따라 상이

- 최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보면,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05년 2조3천억에서 '13년에는 3조8천5백억 원으로 크게 증가
 - 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규모는 '05년 5,100억에서 '12년까지 4,25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다가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13년 7,500억으로 증가
 -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21.9%에 이르던 것이 '10년에는 9.6%까지 낮아졌고, '13년 들어 19.5%로 대폭 상승
-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크기를 비교해 보면,
 -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 사업체수는 약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업체의

종사자수는 '10년 현재 중소기업의 약 44%에 달하고 있음.

- 사업체 1업체당 정책자금 지원금액과 종사자 1인당 정책자금 지원금액을 비교하면,
 - 업체당 지원규모는 '05년 24.8% 수준에서 '10년 10.9% 수준으로 대폭 감소
 - 종사자 1인당 정책자금 지원규모 또한 '05년 46.8%에서 '10년 22.0% 수준으로 하락
- 또한, 통계청 자료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종업원 1인당 연매출액을 비교하면,
 - '10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에서는 중소기업은 50억4천3백만 원이고 소상공인은 2억2천5백만 원으로 중소기업이 20배 정도 높고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범주 내에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결코 작지 않음.

<표 4-38> 중소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사업체, 종사자, 정책자금 규모 비중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중소기업(A)			소상공인(B)			비중(B/A)		
	사업체수	종사자수	지원규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지원규모	사업체	종사자	지원규모
2005	2,863,583	10,449,182	23,305	2,526,888	4,882,670	5,100	88.2	46.7	21.9
2006	2,936,114	10,677,789	23,568	2,596,901	5,018,884	4,552	88.4	47.0	19.3
2007	2,974,185	11,343,707	28,308	2,612,222	5,102,578	3,457	87.8	45.0	12.2
2008	3,044,169	11,467,713	26,344	2,675,270	5,194,991	2,890	87.9	45.3	11.0
2009	3,066,484	11,751,022	42,555	2,685,856	5,217,922	10,967	87.6	44.4	25.8
2010	3,122,332	12,262,535	31,355	2,748,808	5,333,561	3,000	88.0	43.5	9.6
2011	-	-	32,075	-	-	4,450	-	-	13.9
2012	-	-	33,330	-	-	4,250	-	-	12.8
2013	-	-	38,500	-	-	7,500	-	-	19.5

<표 4-39>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사업체·종사자당 지원규모 비교

(단위: 원, %)

구분	중소기업 정책자금(A)		소상공인 정책자금(B)		비율(B/A)	
	업체당 지원규모	종사자 1인당 지원규모	업체당 지원규모	종사자 1인당 지원규모	업체당 지원규모	종사자 1인당 지원규모
2005	813,841	223,032	201,829	104,451	24.8	46.8
2006	802,694	220,720	175,286	90,697	21.8	41.1
2007	951,790	249,548	132,339	67,750	13.9	27.1
2008	865,392	229,723	108,026	55,631	12.5	24.2
2009	1,387,746	362,139	408,324	210,179	29.4	58.0
2010	1,004,217	255,698	109,138	56,248	10.9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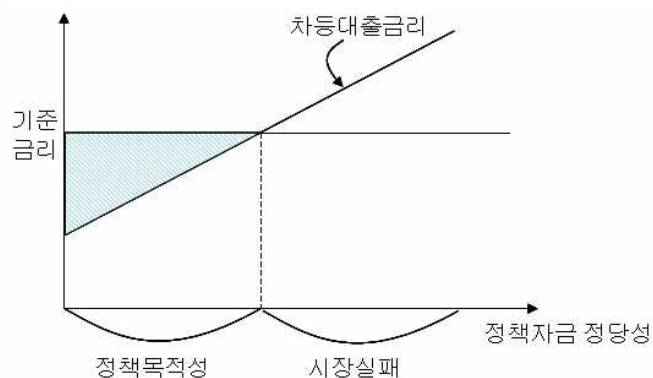
- 중소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소폭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체 비중 약 88%, 종사자수 비중 44%에 비해 10%대의 지원규모 비중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수준
 - 업체당 지원규모와 종사자수 1인당 지원규모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서 각각 10.9%와 22.0%의 비중(10년 기준)에 불과하여, 매출액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높지 않은 수준
- 또한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지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정 비중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신청 하루만에 자금이 전액 소진되는 등 초과수요의 문제가 작지 않음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초과수요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 각 지자체의 '1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고, 충남 역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12년 850억에서 '13년 1,250억으로 대폭 확대
 - 이러한 지자체들의 정책자금지원의 확대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에는 작지 않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식과 유사할 뿐 아니라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지원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비효율이 잠재
- 본 연구의 효과분석 결과 뿐 아니라 강종구·정형권(2006)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정책자금 지원은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혁신형 창업초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더 집중하고,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한정된 자금의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제3절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1. 정책자금 적정금리 산정에 관한 논의

-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저금리 융자 혹은 이차보전을 지원
 - 저금리 지원과 이차보전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만약 우량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정책자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시장실패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정책자금이 시장 대출금리보다 낮게 그리고 일정 자격요건만 고려하여 지원된다면,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들은 금리 면에서,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은 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 결국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조차 정책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착 지원받아야 할 기업들은 구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비대칭 하에서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로 인한 정부실패
 - 또한 정책자금 수요자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은 이후에 정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위험이 높은 투자에 정책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 가능
 - 결국 정책자금 금리의 결정은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임.
- 저금리의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는,
 - 민간금융기관은 대체로 단기 담보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므로, 정책금융은 현재 시중보다 낮은 수준에서 장기 신용대출 형태로 운용되어 소상공인 자금 초과수요 보완 및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켜 주어야 함.
 - 정책자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금리가 낮을수록 기업의 안정성과 활동성이 높고, 특히 수익성 향상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저금리의 정책금융 금리수준에 부정적인 입장은 주로 도덕적 해이와 정책금융 실수요자의 기회감소에 대한 우려에 기인
 - 재정적으로 양호한 기업도 불필요한 정책자금에 지원하여, 정작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 정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민간의 자금중개기능 발달이 저해
 - 이기영·조영삼(2011)은 중소기업에게 금리수준보다 자금조달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시장 기준금리 수준보다 높여 재정을 확충하여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
- 결국 정책자금 금리 수준의 결정은 정책자금의 실효성 여부와 저금리 지원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문제로 귀결
- 현재 정책자금 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낮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시장실패보다는 정책 목적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의미
- 결국 정책자금은 시장실패 보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자금의 운용목적에 따라 금리를 차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정책자금 운용 목적이 불명확하면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정책대상의 혼동을 초래하게 되고, 정책집행단계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하게 됨.
 - 정보 비대칭이나 담보부족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보완이 목적이라면 공적 신용보증을 통한 신용보강도 좋은 지원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임.
 - 여성,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혁신형 중소기업 혹은 미래성장동력과 같은 산업·경제 정책적 지원이 목적이라면 저금리 지원, 만기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장지인·윤병섭(2007)은 정책목적성을 고려한 차등대출금리 체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기능을 정책적 목적 달성과 시장실패 보완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목적 달성은 저금리 지원으로, 시장실패 보완은 상대적 고금리로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



- 이와 함께 자금수요자의 신용위험도에 따른 위험조정(risk-adjusted) 대출금리를 적용
 - 자금수요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형적인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실패의 문제를 악화시킴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고, 신용위험이 높은 수요자의 지원이 증가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수요자가 구축되는 현상이 발생
- 하지만, 공공성, 형평성, 사회안전망, 약자에 대한 보호, 지역균형개발 등의 정부의 정책 목적이 분명할 때는 시장실패 부분이 일정부분 존재하더라도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집행해야 할 필요도 존재
 - 경제여건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금리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
 - 구조조정, 수출, 상생, 협동화, 혁신기업 등의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은 저금리로, 그리고 창업자금, R&D 자금 같은 시장실패의 보완은 상대적 고금리와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2. 정책자금 금리결정 방식

■ 정책자금 적정금리 수준의 결정

$$\text{'적정금리'} = \text{기준금리} + \text{정책목적성 스프레드} + \text{위험프리미엄}$$

○ 기준금리

- 기준금리는 업무원가를 포함한 조달금리로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

○ 정책목적성 스프레드

- 저금리 대출지원일 경우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는 음수(-)값이 적용되지만, 정책자금 지원이 정부 시장실패⁵⁾의 보완이라면,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는 0이거나 작은 양수(+)값
- 정책목적성 사업은 협동화사업, 수출금융지원, 구조개선 등이고, 시장실패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이 해당
- 운전자금지원은 시장실패보다는 정책목적성이 강하며, 시설자금지원은 정책목적성보다는 시장실패의 성격이 강함.

○ 신용등급과 위험프리미엄의 산출

- 업체의 시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사업성을 평가지수화하여 비재무등급을 산출하고, 업체의 사용가능한 재무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무등급을 산출한 후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결정
- 신용등급 결정 후 자금별 가감점을 포함한 최종등급을 산출하고, 자금별 지원결정 등급에 따라 자금대출을 결정
- 정책자금은 직접대출 뿐 아니라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역마진으로 인한 이차보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적 신용보증도 지원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부실율이 높은 편이고 잠재 부도율도 높음을 고려

5) 시장실패는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을 경우 특정한 경제주체(주로 대기업)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경우, 시장의 비대칭적인 정보의 존재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소기업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시장기회가 발탁되기 쉬워 중소기업의 역량과 위험도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기업의 역량에 관계없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3.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1) 설문조사 결과

- '12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높은 금리와 각종 부대비용(49%)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증서 및 보증서 요구(27%) 등이 대출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지적
 - 대출액 규모별로는 대출액 규모가 낮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금리와 부대비용이 대출 실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
- 하지만 정책금융의 장점 또한 낮은 금리 수준 때문(6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낮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4-22> 정책금융의 선호 혹은 미선호 이유

2)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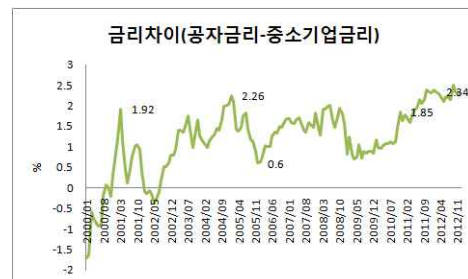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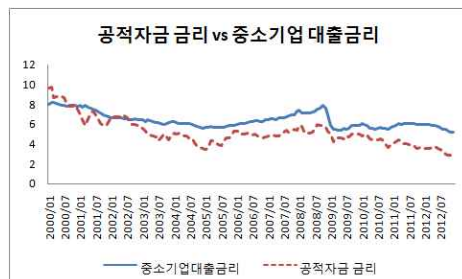
- '13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를 가산하여 지원 목적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
 - ※ '13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59%
-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⁶⁾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창업기업지원과 신성장기반 자문에 차등적 금리를 적용

6)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공자기금 대출금리 - 0.45%p

※ 신성장기반 자금: 공자기금 대출금리 + 0.05%p

- 따라서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일반자금과 특화자금에 따라, 그리고 지원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수준을 보면, '13년 기준으로 충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1.75~2%p의 이차보전을 제공
 - 이러한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지자체로서는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규모에 대한 부담을 작고, 금융회사가 대출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하므로 자금수요자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시장원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음.
 - 하지만,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정책적 목적보다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
 - '12년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상 시장대출금리와 공적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p 이상임을 고려할 때, 현재 충남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1.75~2%p의 이차보전 제공은 소상공인 대상 정책적 목적의 저금리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남도에서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적용하여 이 부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DB

<그림 4-23> 공적자금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변화 추이

- 결국 정책자금의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원대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금리, 지원한도, 지원규모, 만기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제4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

1) 과잉화에 따른 높은 경쟁 및 저마진 구조

■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의 높은 비중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는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가 많다는 점이고, 이는 자영업자의 고령화 현상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
 - 최근 설문조사(매일경제, '11.12)에 의하면 설문응답자 중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직장에서의 퇴직이라는 응답이 약 25%이며, 이는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다른 대안부족에 주로 기인
- 결국, 은퇴후 고령의 자영업 창업은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창업한 결과 자영업체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게 됨.
 - 도소매 및 음식숙박 밀집 현상은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

■ 영세성

- '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소상공인의 58.3%
 - 상당수의 자영업 종사자는 가계지출이 소득을 상회하여 적자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임금근로자(임시 일용직 제외)가 78.9%인데 비하여 자영업자는 159.2%로 2배 수준
 -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 사업체의 과도한 난립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는 사업체 경영을 통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이 '09년에 발표한 '사업별 생명분석'을 보면, 자영업자가 창업한 점포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존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자영업자 창업 후 1년간 생존률 70% 수준이나, 2년차, 3년차에서는 생존율이 55%, 45%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소상공업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공급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영업 부문의 공급과잉은 '공급과잉 → 사업부진 → 소득저하 → 부채증가 → 생활 불안초래 → 신규자영업재진입 → 과잉공급' 이라는 악순환에 봉착될 가능성이 높음.

2) 금융기관의 금융소외 문제

■ 정보의 비대칭성

-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큰 문제인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회계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축적된 정보가 없어 상환가능성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
 - 차입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사업자의 상환의지, 사업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
 -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를 요구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담보 제공능력도 낮아 금융기관은 자금제공을 기피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경우 자금공급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
 - 정부의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금융접근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높은 금융비용

- 대출 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가 존재
 - 관리비용에는 정보수집비용과 분석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분석기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 정보 분석에 많은 비용이 소요
 - 금융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이러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의 대출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의 성과

- 정부/지자체는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 직접대출, 특수목적 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이차보전, 공적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금융을 지원
 - 본 연구의 분석결과, 거시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부문 등에서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도 투자활성화와 고용증대, 조세수입의 증가, 국민경제 성장 등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
- 미시적 분석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상공인의 경영상 가장 큰 문제점인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비용의 축소 등 재무적인 측면에서 경영 개선 효과
 - 사업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 대기 창업자와 사업자에게 창업기회와 사업확대 기회를 제공
 -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 증가에 기여
-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대상 및 방식이 유사하여 중복지원의 문제가 존재하고, 자금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방식은 재정여건 혹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유사
 -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높지 않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용금리 또한 지원대상의 특성과 지원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
 - 본 연구의 분석결과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창업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가장 크고 정책목적에 따른 차등적 금리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선정은 상당부분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목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제5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1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재검토

1. 현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검토

- 정부는 IMF 위기 이후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예산확보와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사업화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상담 기능과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규모는 '0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감안하여 5,00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총 1조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0년에는 경기회복 예상 및 장기적인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민간금융 활용을 유도할 계획으로 예년 수준으로 대폭 축소
- 예산편성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금의 운용관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체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사업계획 수립은 중소기업청이, 시행주체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보증서 발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취급은 시중은행이, 재원조달 및 기금관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업무를 분담

<표 5-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기관 운영체계

기관	운영체계 및 역할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수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 컨설팅 확인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심사 - 신용보증서 발급
시중은행(17개)	- 채권보전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차입 요청 및 상환
중소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원조성 - 협약 은행에 대한 기금 대여 및 회수

- 하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적
- 우선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창업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일부 업종의 편중현상 등을 야기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산하 자금이 복지정책과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사업배경과 담당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해짐.
 - 자금지원의 구성 내용면에 있어서 시설자금은 감소하고 단순 운전자금은 계속 증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
 - 금융기관의 높은 연체비율과 사업담당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보증사고율로 자금지원 건전성이 열악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반대로 순수 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금융시장 기능에 부정적 영향

2. 지자체(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지원은 특정 산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지원한다는 특징
- 하지만 현행 지자체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수혜업체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단순히 지원규모만을 확대하는 경향
 - 위험관리 없이 고용의 창출, 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을 지원하며, 대체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 명확한 정책대상 설정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용자의 성과측정이 곤란하여 자금 운영의 비효율 발생
 - 체계적인 성과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순한 자금지원정책은 도덕적 해이, 부실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지의 악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
 -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높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자금지원의 성과를 높이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일 필요성 존재
- 결국 직접대출보다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관리 경험과 체계가 있고 보증승수를 통한 자금의 공급 확대가 가능한 지역신보의 보증확대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자금 운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

3. 2013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정기정책방향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병행

■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류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대형 유통업체가 활용하는 각종 마케팅 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이를 위해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 배송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 영세 소매업체 전담 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유도

- 경영컨설팅 등 자영업 토달서비스를 제공할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충
- 위기 자영업자 부활프로젝트로 가게 안정화 추진
 -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 300억원 지원 및 교육, 사후관리 등 지원
 - 전통시장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아카데미 운영
 - 대박, 오뎅이 프로젝트를 통한 자영업의 성공기반 구축
 - 기존 자영업자를 위한 대박프로젝트 추진: 친절교육, 경영진단, 요리 및 위생지도 등 성공을 위한 지속적 지원
 - 업종전환 및 재창업자(폐업자 포함)를 위한 오뎅이 프로젝트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상권분석, 친절교육, 경영컨설팅 등 창업지원
 - 성공한 소상공인이 멘토가 되어 성공 노하우를 후배 소상공인에게 전수하는 순환식 체계 확립

■ 영세상인들의 부담해소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결제 단말기 무료보급
 -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를 1.6~1.8%나 1.5% 이하로 추가인하

■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만들기

- 전통시장의 불편 해소: 아케이드, 화장실,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 확충
- 문화, 교류, 복지 등의 기능 강화: 전통시장 내 문화교실(인문강좌, 노래교실, 서예, 탁구교실 등) 확충으로 사람들이 시장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인 제공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나 기존의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문화, 교류, 복지, 학습, 정보 등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교류의 거점'으로서 시장의 역할 재정립
 - 1대학 1시장, 1기업 1시장 후원: 대학인근 전통시장 등과의 인적, 물적 교류확대로 시장활성화(물품우선구매, 대학동아리 문화예술활동, 시장 환경디자인참여, 시장경영자문 등)
 -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 시장축제, 길모퉁이 콘서트, 아침개장, 춤·노래경연대회 등의 이벤트 개최를 통해 고객들의 흥미 유발

■ 편리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 '시장의 경쟁력 높이기'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로 마트만큼 편리한 시장 조성
 - 공동배송서비스 100개소로 확충 및 고객센터 조성으로 무거운 장바구니 걱정없는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
 - 배송센터 설치 및 택배회사와 쿠팡서비스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추진
-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 신설 및 원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약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설립

- 서민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다면 별도 기관의 설립보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중앙회의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보증의 형태가 바람직
 - 지역신보는 현재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나들가게 지원, 소상공인 정책융자제도 등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금융회사의 부족한 여신심사능력을 보완

- 별도의 서민신용보증기구 운용에는 신용정보 및 관리시스템, 경험 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요소의 결여시에는 상호금융기관 및 정부 재정의 동시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음.
- 현재 저신용 개인 생계비 보증, 햇살론 등과 같은 대출보증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서민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보증지원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 취급기관이 일부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도에서도 개선이 필요

제2절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 만성적 초과수요의 해소

■ 명확한 정책대상의 설정

- 정책자금의 목적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명확한 자금지원 대상 설정이 필요
 -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정책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야기하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본래 목적에 맞춰 지원대상 범위와 자금지원 규모를 명확히 설정

■ 지원자금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매년 예산에 의해 편성되어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탄력적 자금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적정 지원규모를 가능한 정확하게 추정하여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시킬 필요

2) 자금운영 효율성의 확대

■ 정책자금 운영시스템의 개선

- 정책자금의 대상은 많고 자금규모는 작아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확대할 필요성 존재

■ 소상공인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 다양하고 정확한 소상공인 관련 정보의 지속적 축적
 - 소상공인의 성장과정에 대한 체계적 정보 축적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공 및 실패 사례의 지속적인 자료화

3) 소상공인 자생력 증대 지원

■ 소상공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적은 영세한 자본과 낮은 신용으로 민간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의 금융 생태계를 조성

2.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안정적·지속적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의 조성

■ 소상공인 전용 지원기금의 조성

- 정부재원 및 민간부문에서 낮은 조달 비용으로 유입된 자금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조성
 - 다양한 소상공인 혁신기회의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의해 창출된 자원(수익)이 다시 소상공인 분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의 조성
 -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및 관련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

■ 소상공인 전담은행의 운영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전담은행의 운영
 -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과 기업가 정신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상공인의 각종 정보, 위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

2) 운영 시스템의 개선방안

■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용 확대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주로 재무적 현황보다는 장기적 사업성을 평가

■ 소상공인 특성(사업목적, 성장단계, 산업별 특성 등)에 따른 차별적 지원

- (사업목적별) 한정된 정책자금을 목적별(사업별)로 자금을 배정
 - 정책자금 보증금액의 업종별 불균형이 심각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업종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과당경쟁업종의 구조조정 유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에 있어 업종별 효과를 고려하여 업종별 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용도별로, 예를 들어 기존사업자, 창업자 그리고 폐업/전업 및 구조조정 등으로 한도를 배정하여 자금을 분배

○ (성장단계별) 혁신 잠재력과 역량수준을 기준으로 구분

- 혁신 잠재력은 사업의 매출-수익 창출 가능성과 보다 발전적인 사업모델로의 확대발전 가능성 등을 의미하고, 역량수준은 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의 보유수준을 의미
- 대다수 소상공인은 고객창출 및 관리, 구매 및 조달 등의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큰데, 이는 매출 및 수익창출 기회를 제약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창업단계의 업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창업초기 자금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창업단계에 있는 업체에게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배분비율을 매출액이나 영업기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이나 영업기간이 떨어지는 소상공 업체에 일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배분되도록 유도
- 정부가 전략적 목표를 갖는 부문에 대해서 우선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방법, 상환기간, 상환조건 등의 다변화가 필요

- 소상공인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 및 육성정책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들 유형 간에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소상공인 개인의 특성(즉, 성별, 나이, 지역, 자산 규모, 신용도 등)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금을 차등 적용
- 소상공인의 각 업종별 비중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환기간, 상환조건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자금의 지원방법, 상환기간, 상환조건에 차등화

■ 소상공인 관련 각종 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역별, 업종별 소상공업체의 평균 매출규모, 수익, 비용 정보의 공유

- 창업시 지역 내에서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재무 정보, 창업 정보 등을 공유

○ 금융기관들이 정책자금 이용자의 창업, 성장단계, 자금상환 이행정도 등에 따라 고객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DB의 구축

- 정책자금 이용과 함께 신용도 개선의 기회제공 및 정책자금 통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성공 및 실패사례의 지속적인 자료화로 정책자금 지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축적
- 정책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유·무형적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정성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실적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진흥원에 부여되어 있으나, 자금관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은행 등 대출기관은 자금회수에 집중하여 정책자금 사용의 적정성 및 경영안정 등의 사후관리에 미흡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자금 회수를 위한 사후관리에만 치중
- 정책자금 이용과 동시에 신용도 개선의 기회제공 및 정책자금 통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자금 추경예산 편성, 목적별 자금배정 등 관련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기능 확대

-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므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은 주요한 정책의 대상일 뿐 아니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게도 큰 고객
 -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양극화 완화를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소상공인은 수가 많고 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내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

3.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1)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 토털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구축

- 소상공인 관련 기관의 연계협력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확대
 - 자금지원 등과 더불어 운영역량의 개발과 축적, 사업모델의 개선 및 차별적 경쟁요인 발굴 등 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
 - 생산적인 영역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공급
 - 현 사업에서의 성과 극대화 및 사업영역의 확대,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변환 지원
 -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의 공유, 여유자원의 소상공산업의 재투자 등을 유도

■ 교육, 컨설팅 기능 확대

- 단순히 자금만을 제공하는 정책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의 현 니즈(needs)에 맞는 지원책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 수요자가 현재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
-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현장과의 괴리 축소
 - 충분한 직업 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기형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유도
 - 소상공인 특성(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 임금근로자의 퇴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부문 창업을 억제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등의 시장 창출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

2) 지역 내 소상공업의 고부가가치 추구

- 지식기반의 소상공인 창업으로 지역 내 소상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지만 음식업이나 소매업 등에 집중한 생계형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직업만족도도 낮을 뿐 아니라 경쟁우위가 없어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모델이나 사업기반의 개발 및 공급이 부

족하고, 대다수 소상공인 창업자가 기존 사업모델이나 아이템을 선택하는 하는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의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의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

- 소상공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의 양적확대와 함께 공급의 다양화, 세분화, 고급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창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단순한 양적확대보다 공급의 다양화 및 차별화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3) 지역 내 소상공인 명품 브랜드의 육성

-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소상공인도 성장단계에 따라 구조적, 질적 변환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물론, 생산 및 제공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 현 사업의 공급채널이나 유통채널 등을 확대통합하거나 보완적, 수평적 서비스(사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
 - 공동브랜드나 공동물류, 원부자재 공동소싱 등의 협력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지원
 -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은 물론, 중소기업 등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사업모델의 소상공 산업에의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
- 분야별 컨설팅, 코칭, 교육, 전문서비스 아웃소싱 등 다양한 지식관련 분야의 지식기반 소상공인 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소수 모델에 대해서는 '공영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⁷⁾
 - 성공사례를 연구기관, 컨설팅사,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체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한 후 소상공인에게 보급
 -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 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구조 구축
 - 업종 및 서비스 등에 있어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간의 브랜드 및 구매조달 기능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 비즈니스 구조 구축

7) 공영프랜차이즈는 운영에 있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창업기업 대상 서비스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고 자체적인 수익사업 참여도 가능토록 하는 방식. 신규 소상공 창업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어 높은 직무만족도 창출이 가능하고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비 위험요인도 낮음.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이들은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회 안전망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 규모가 영세하여 대내·외 경제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충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소상공인들은 인구 및 금융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사업환경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난 '99년 이후부터 매년 3,000~5,000억 원 규모로 큰 변동 없이 일정수준 유지되어 오다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경기조절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인해 '09년 1조원까지 그 지원규모가 확대되었고, 금융위기의 진정국면 도래에 따라 다시 예전수준으로 복귀하였지만, '13년 들어 영세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그 지원규모가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내용과 방식을 살펴보면, 자금수요와 활용계획에 따른 지원 효율성보다는 주로 창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더 치중해 온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창업 업종의 편중도를 높이는 등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영업환경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긍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부문 등에서 작지 않은 성과를 보여 주었고, 미시적 분석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해소, 금융비용 축소 등 재무적인 측면에서 경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수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고, 또한 소상공인 정책금리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는 창업초기의 혁신기업에서 가장 크게 높고, 시장실패(창업, 기술혁신 등)로 인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저금리보다는 지원규모 확대 혹은 공적 신용보증 등으로 지원효과를 상당부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자금

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지원대상의 특성, 지원자금의 사용목적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저금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지원 체계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대상 및 방식이 유사하여 지원대상의 선정과 중복지원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요컨대, 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따져 보면, 먼저 단순히 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범주를 업종, 업력, 매출액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형평성 및 정책 목적성에 맞게 대폭 증가시켜야 하고, 정책자금 적용금리도 지원대상과 지원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영상 효율 증대를 위해 창업지원 및 시설자금은 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자금 및 운전자금 등은 지자체가 저금리 방식으로 지원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 목적성 지원과 운전자본 등은 가능한 저금리로, 창업지원, 시장실패 보완, 시설자금 지원 등은 저금리 지원 대신 지원한도를 늘려 주거나 신용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연계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큰 틀 하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의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자체는 무조건적인 장기저리 자금의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지역 내 특성, 지자체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자금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은 창업에 소요되는 자본규모가 작고 기술의 특수성이 떨어지며 진입 탈퇴도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서 소상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상공업은 지역경제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재화나 서비스, 즉 생필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 중 40%가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상공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및 내수를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상공업은 대부분 소규모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을 사업주 개인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창업 이전에 해당 업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 없이,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나 상권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상공인은 가족 중심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미숙련 노동자나 여성, 실직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소상공인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소상공업은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대면방식에 의해 구매행위가 이루어져 지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업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소상공업의 영업권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기반이 강하여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며, 지역경제의 소득순환의 매개체가 되므로, 소상공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내 경제흐름이 원활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설문조사(매일경제, '11.12)에 의하면 설문응답자 중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직장에서의 퇴직이라는 응답이 약 25%나 되는데 이는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은퇴후 고령의 자영업 창업은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창업한 결과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소상공인의 58.3%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수의 자영업 종사자는 가계지출이 소득을 상회하여 적자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은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09년에 발표한 '사업별 생명분석'에서도 창업 이후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상공업의 근본적 문제는 소상공인의 과잉공급으로, '공급과잉 → 사업부진 → 소득저하 → 부채증가 → 생활불안 → 신규자영업재진입 → 과잉공급'이라는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소외 문제도 심각하다.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차입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사업자의 상환의지, 사업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소상공인의 경우 회계정보가 미흡하고, 개인에 대한 축적된 정보도 없어 상환가능성에 대한 많은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를 요구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담보제공능력도 낮아 금융기관은 자금제공을 기피하는 소상공인의 금융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비제도권 금융기관 혹은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작지 않은 금융비용을 추가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금리 직접대출, 특수목적 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이차보전, 공적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 또 실제로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원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크게 늘어났지만, 창업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일부 업종의 편중현상 등을 야기하였다. 둘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산하 자금이 복지정책과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사업배경과 담당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자금지원의 구성 내용면에 있어서 시설자금은 감소하고 단순 운전자금은 계속 증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셋째, 금융기관의 높은 연체비율과 사업담당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보증사고율로 자금지원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반대로 순수 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금융시장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도 특정 산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정기준 없이 선착순 지원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대상을 지원하고 있고, 수혜업체에 대한 시장성과 수익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단순히 지원 규모만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성과측정이 미흡하여 자금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와 부실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지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재원 및 민간부문에서 낮은 조달 비용으로 유입된 자금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조성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혁신기회의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의해 창출된 자원(수익)이 다시 소상공인 분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장기적 기반 조성과 함께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및 관련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전담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회계 자료 등이 부족하므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전담하여 소상공인의 각종 정보, 위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소

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주로 재무적 현황보다는 장기적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정된 정책자금을 업종별(목적사업별)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보증금액의 업종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과당경쟁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용도별로, 예를 들어 기존사업자, 창업자 그리고 폐업/전업 및 구조조정 등으로 한도를 배정하여 자금을 분배하고, 혁신 잠재력과 역량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배분비율을 매출액이나 영업기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이나 영업기간이 떨어지는 소상공 업체에 일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전략적 목표를 갖는 부문에 대해서 우선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방법, 상환기간, 상환조건 등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소상공인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 및 육성정책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이들 유형 간에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으로 소상공인 개인의 특성(즉, 성별, 나이, 지역, 자산 규모, 신용도 등)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금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들이 정책자금 이용자의 창업, 성장단계, 자금상환 이행정도 등에 따라 고객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전용 차세대 DB를 구축하고, 정책자금 이용과 함께 신용도 개선의 기회제공 및 정책자금 통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성공 및 실패사례의 지속적인 자료화로 정책자금 지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하고, 정책자금 이용과 동시에 신용도 개선의 기회제공 및 정책자금 통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자금 추경예산 편성, 목적별 자금배정 등 관련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정성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여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책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정책자금 성과관리시스템에는 지원규모의 적정성, 분야별 균형 등 지원원칙의 객관성과 형평성,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정책자금의 사업적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실적의 기본통계를 정비하고 사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조성과 이에 따르는 자금운용을 반영하는 계획 수립 등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정책 외에도 소상공인 경쟁력·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 관련 기관의 연계협력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지자체는 자금지원 등과 더불어 운영역량의 개발과 축적, 사업모델의 개선 및 차별적 경쟁요인 발굴 등 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적인 영역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공급하며, 현 사업에서의 성과 극대화 및 사업영역의 확대,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변환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의 공유, 여유자원의 소상공산업의 재투자 등을 유도하는 등의 교육,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단순히 자금만을 제공하는 정책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의 현 니즈(needs)에 맞는 지원책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수요자가 현재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현장과의 괴리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직업 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기형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특성(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자의 퇴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교육 강화 및 경쟁이 치열한 부문 창업을 억제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등의 시장 창출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의 소상공인 창업으로 지역 내 소상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지만 음식업이나 소매업 등에 집중된 생계형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직업만족도도 낮을 뿐 아니라 경쟁우위가 없어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모델이나 사업기반의 개발 및 공급이 부족하고, 대다수 소상공인 창업자가 기존 사업모델이나 아이템을 선택하는 하는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의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의 양적확대와 함께 공급의 다양화, 세분화, 고급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창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단순한 양적확대보다 공급의 다양화 및 차별화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 내 소상공인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여야 한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보급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성장단계에 따라 구조적, 질적 변환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물론, 생산 및 제공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현 사업의 공급채널이나 유통채널 등을 확대통합하거나 보완적, 수평적 서비스(사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하고, 공동브랜드나 공동물류, 원부자재 공동소싱 등의 협력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지원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은 물론, 중소기업 등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사업모델의 소상공인 산업에의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야별 컨설팅, 교육, 전문서비스 아웃소싱 등 다양한 지식관련 분야의 지식기반 소상공인 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소수 모델에 대해서 ‘공영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성공사례를 연구기관, 컨설팅사,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체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한 후 소상공인에게 보급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 간 협력적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업종 및 서비스 등에 있어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간의 브랜드 및 구매조달 기능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 비즈니스 구조 구축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책제언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선별되어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향후 소상공인과 관련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여 심도 있고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 정책의 성과, 효율 등을 평가하고 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종구, 정형권 (2006),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50호, pp.87-119
- 김세종 (2009),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개편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 김세종 외 (2011), '2010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중소기업지원 사업군(II)(금융지원사업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중소기업연구원·경제사회정책평가연구원
- 김현옥 (2005a),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 제27권 2호, pp.45-87
- 김현옥 (2005b),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0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141-188
- 이윤보, 심충진, 김문현, 이동주 (2006),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8권 1호, pp.203-226
- 송치승, 이종욱, 노용환, 조태근, 정승일, 표한형, 홍성철 (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방향 연구', 중소기업 연구원
- 신상훈, 박정희 (2010),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중소기업연구', 제21권 1호, pp.43-64
- 안종범·우석진·정지운 (2011), '기술보증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재정학연구 제4권 2호, pp.123-150
- 양현봉, 조덕희, 홍석일 (2007),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차별성 및 유효성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 왕성철, 임혜진, 황인국 (2008), '신용보증의 거시성과 및 미시성과 분석', 신용보증기금
- 이기영 (2006)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향', 재정학연구 제20권 2호 pp.203-229
- 이기영, 조영삼 (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이종욱 (2011),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중소기업연구 제33권 1호 pp.17-32
- 장지인·윤병섭 (2007), '중소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자금의 역할', 국제회계연구 제17권, pp.1-22
- 홍순영, 이종욱 (2010),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 집 필 자 ■

연 구 책 임 · 윤상용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원 / 경영학 박사

연 구 자 · 박순홍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경영학 박사

연 구 자 · 이소현 신용보증기금 / 경영학 박사

연 구 자 · 김희영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전략연구 2012-23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개선방안

글쓴이 · 윤상용외 3인 / 발행자·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2년 12월 31일 / 발행 · 201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23(기획조정실) 041-840-1114(대표) / 팩스·041-840-1129

<http://www.cdi.re.kr>

© 2012,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